

천안함 침몰

거짓말 정부, 못 믿겠다

“이 불가사의한 나라에 이제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납니다.”(천안함 사고 실종자 가족인 황영수 씨가 해군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이번에 정부와 군 당국이 보인 행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했다. 사고 시각, 사고 장소, TOD 영상 촬영 시간 등에 대한 군의 설명은 금세 거짓말로 드러나거나 끝없이 바뀌고 있다.

군은 생존자 56명을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서 입을 막아 놓고 취재도 가로막았다. 뒤늦게 생존자 기자회견을 했지만 “마치 짜 맞춘 듯한 각본”(한 실종자 부인)처럼 보였다. 진실을 밝힐 열쇠가 담겨 있을 교신일지는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령도 주민들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경찰과 기무대가 찾아온다”며 입을 닫고 있다. 군은 선체를 인양해도 절단면을 공개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뭔가 속이려다 보니 자꾸 반복하고 호도하고 말이 꼬이는 것”이며 “뻔뻔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혹

이런 의혹 속에 온갖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이 낡아 물이 새고 있었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은 사실인가? 한국군이 “무리하게 운용해 온” 것 때문에 군함들의 “선체 균열이 심각”하다는 <조선일보> 2004년 9월 23일치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고 당시 서해에서 진행된 복합 예행 연습인 한미합동 독수리 훈련이 이번 사고와 관계 있지 않은가? 천안함이 최근 총 2톤이 넘는 ‘하푼’ 함대함 유도탄 4기를 무리하게 장착하면서 선체에 무리를 준 것은 이번 사건과 관계 없는가?

왜 장교들은 전부 생존했고 실종자는 전부 부사관과 사병인가? 왜 속초함은 사고 직후 ‘새떼’에게 5분 동안 1백30여 발이나 함포 사격을 했는가? 속초함이 함포 사격을 한 시각에 왜 KP-16전투기가 서해로 비상 출격했는가?

MBC가 입수한 군 상황일지에서, 천안함이 사고 당시 전속력으로 18분 동안 9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천안함은 왜 평소에 가지 않는 육지 근처 수심이 얇은 곳까지 갔는가?

정부와 군 당국은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을 은폐하며 이런 의문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우파의 ‘복풍’ 선동 속에 정부가 공안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진상 규명·무사 귀환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크리스찬 올리버 서울지국장이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는 비틀린 음모론과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대중의 커다란 저항 속에 계속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이다.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근거 없는 북한 관련설 흘리는 김태영 국방장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군 당국과 정부



실종자 가족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울분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위기 모면 위해
북한 관련설
흘리는 우파

정부와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는 와중에 우파 언론들은 북한 관련설을 계속 흘리고 있다. 조중동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발사설’, ‘북한 기뢰 폭발설’ 등을 꾸준히 제기했고, 심지어 ‘북한 인간어뢰 공격설’ 같은 황당무계한 상상력까지 드러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조차 북한 관련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사프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된 바 없다”고 했고, 미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도 “[북한 개입이] 사고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 원태재조차 “북한 잠수함, 반잠수함의 특이 활동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조중동도 뚜렷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북한 공격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결정해야” 하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분쟁수역

사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몇 차례나 교전이 벌어진 ‘분쟁수역’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속에서 이 지역의 긴장은 더 고조돼 왔다. 정부가 교전수칙을 단순화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함정이 반파되는 3차 서해교전이 벌어졌고, 올해 1월에는 북한이 서해로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복합 예행 연습까지 벌어지며 긴장을 더 고조시키다가 그 기간에 이번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사고 직후 속초함은 NLL 북쪽으로 5분 동안이나 함포 사격을 했다. 이것은 ‘대북 선제공격’ 운운해 온 국방부장관 김태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태영은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발표부터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명박이 주재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남한 정부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도 발포했다. 이 대응은 하마터면 북한과 의도치 않게 전쟁을 벌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화약고 옆에서 불장난을 하는 우파의 광기 어린 행태에 정말 등골이 서늘할 지경이다.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 3면

세상을 이끄는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잘 아는데 배가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은 …”

안 해 본 게 없는 이명박

“아사다 마오 만나면 트리플 악셀도 해 봤다고 할 기세”

이명박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이명박 장로만 한 거짓말의 달인은 못 봤다”

명진 스님

“안상수를 저희 불자로 만들고 싶다. 그냥 불자가 아니고 ‘행복자’, ‘행방불명된 자’, 군대 영장 만나오면 행방불명자가 된다”

명진 스님

“짜파게티도 좌파게티라고 할 기세”

안상수의 ‘좌파’ 타령에 한 네티즌이

“군대 안에도 좌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군대에서도 좌파들이 고의적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배(천안함)를 갈라 났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강남교회 목사 김성광

“이건희 회장이 복귀 멘트라고 올린 글은 멘트나 메시지라기보다는 한편의 시에 가깝다. … 진실한 언어로 아름다운을 잉태하기까지 그는 여러 번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됐다. … 만약 위대한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사무실에 이 시를 걸어 뒤라”

〈머니투데이〉

편집인 박종연의 이건희 찬양

“가족들에게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신분을 감춘 일이 없다”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프락치 활동한 것을 두고 평택경찰서

“당신들처럼 ‘높고 가진’ 사람들이야 자식들 아니 당신들 선조 때부터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지녀 본 적이 없으니 자식들 군에 보낸 부모의 그 애닦는 마음을 절대 알 턱이 없지요”

천인함 실종자 가족 촬영수 씨

“엠비아웃” “쥐를잡자” “끼쥐 새들” “엠비탄핵”

선관위가 주최한 투표 독려 기자회견 응모에 쇄도한 의견들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км 미터 퍼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현로), 녹두(동국대 후문), 숨어있는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고(故) 박지연 씨

삼성이 죽인 ‘또 하나의 가족’

지난해 12월 유례 없는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이건희가 최근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범죄자가 다시 범죄 현장에 복귀한 것”이고,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뇌물과 더 많은 무노조 탄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3월 31일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젊은 여성 노동자 박지연 씨가 싸늘하게 죽어 갔다. 방사선과 유해 화학 성분에 노출돼 직장 생활 32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린 그는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겨우 스물세 살 나이에 숨졌다.

가난을 이기려고 고3때 삼성전자 온양 공장에 입사해 역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한 박지연 씨가 받은 월급은 고작 1백30만 원 안팎이었다.

삼성에 의한 타살

반면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은 박지연 씨가 1년 동안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을 1년 연봉으로 받았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는 밝혀진 것만 9명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



사진: 김민희

4월 2일 박지연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삼성전자 본관 앞 일인시위를 경찰과 삼성 직원이 막아내고 있다.

이 반올림’이 지금까지 찾아 낸 백혈병 피해자는 사망자를 포함해 22명이다.

박지연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방사선 기계를 끄지도 않은 채 문을 열고 제

품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방사선의 위험성도 듣지 못했고,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주의연구회 조세훈 대표

“경찰이 우리를 표적 사찰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영상집단 ‘청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수사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학생들까지 감시·사찰하며 탄압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사찰 피해자인 조세훈(서울대학교 국문과 4학년) 씨를 만나 자조지종을 들었다. 조세훈 씨는 현재 대학생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 [서울대학교] 전산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IP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거래는커녕 주식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의아해서 전산실에 가 보니 조사를 하는 기관이 보안3과였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자본주의연구회] 후배도 조사 대상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에 나온 보안3과 경찰에게 ‘무슨 이유로 조사를 했냐고 전화를 하자, 너무 당황해 하며 말을 잊지 못하더라구요.

“외국환거래법이 아닌데 왜 조사하느냐고 하니까 ‘아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것 같… 저는 할 말이 없고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 그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조세훈 씨는 대학 당국들이 경찰의 외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함께 공문에 나와 있던]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공문을 받은 사실을 부정했어요. 공문서에 찍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 확실한데…”

조세훈 씨는 이번 사찰이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공분실로 연행된 하인준 건국대학교 당시 총학생회장도 자본주의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하인준 씨가 대공분실에 갔을 때 허리 높이만큼 문서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서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일로 표적 수사를 해 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훈 씨는 “이 일은 자본주의연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강조했다. “다른 학생단체들도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정부입니다. 실천연대나 범민련 서버 추적도 있었잖아요. 종교든, 방송이든, 정치권이든, 학생이든, 모든 분야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세훈 씨는 학생단체, 교수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경찰

의 통신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도 준비중이다.

“위기 시에는 대학생들의 행동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와 경찰이 퇴행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

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깎아먹는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대응이든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기자 susumul@left21.com

플라주 25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삼성반도체의 원리

권력과는 도체, 노동자와는 부도체

일루전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출소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구속된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을 받아, 구속 6개월 만인 4월 5일 만기 출소했다.

강성철 동지는 택시 해고노동자로서 2000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후 오토론 투쟁, 한성여객 파업, ‘노사관계로드맵’ 아합 한국노총 항의 투쟁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철 동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급속노조 집회 현장에서 체증을 하던 사복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 평택경찰서에 구속된 동지를 면회 갔다가 주차를 막는 전경과 경찰들에게 항의한 것 때문이었다. 판결 내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장에 들어와 허락도 없이 사진 채증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항의한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에 평택경찰서 전경과 경찰들이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에 항의한 강성철 동지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강성철 동지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으로서 구속노동자들을 면회하고 감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이 강성철 동지를 무리하게 구속한 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 탄압이자, 인권운동 탄압이었다.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면서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을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려는 술책이다.

강성철 동지는 석방 후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그 날을 앞당

길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강성철 동지 석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다함께, 민주노총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석방대책위는 강성철 동지를 옥바라지 하면서 기자회견과 석방을 촉구하는 신문광고, 1천 장에 가까운 탄원서를 조직했다. 일본의 정치단체 ‘인민의힘’과 반전단체 ‘AWC 일본위원회’는 2백여만 원을 모금해 보내 왔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이명하 천안함 사고 실종자 가족

처조카 균석이 천안함 사고로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나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 밑 캄캄한 선실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숨져 갔을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가빠옵니다.

천안함 사고 소식을 접한 아내는 사흘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몸살을 앓으며, 실종된 이종 조카 균석이 고통 속에서 죽어 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혼절에 혼절을 거듭한 처이모와 가족들은 평택항과 백령도를 떠돌며 군 당국에게 빠른 구조와 수색을 요구하며 절규했습니다. 한계를 넘는 인내심으로 생환만을 손꼽아 기다렸건만, 그토록 많은 눈물과 울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도 사고 원인 규명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형을 원망하며 “엄마 아빠와 함께 죽어 버리겠다”는 균석이 동생의 가슴속에는 군 당국과 정부에 대한 분노와 울분만 차오르고 있습니다.

해군 자원을 권유했던 균석이 아버님은 자책 끝에 오열했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군인으로 만들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절망과 분노

사고의 진상을 숨기기에 급급한 군 당국의 행태에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동 대응이 잘 됐다”는 이명박과 국방장관 김태영의 역겹고 뻔뻔스런 말과는 달리, 해군 당국과 정부의 대치는 정말이지 절망과 분노만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현장에 부표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구조함도 조기 투입되지 않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실종자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의 “[우리는 정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했다.

았으며, 4시간가량 버틸 수 있는 산소를 주입했다는 발표조차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무리하게 진행된 구조작업으로 수중 폭파팀(UDT) 요원 한주호 준위가 희생됐고 수색 작업에 동원했던 쌍끌이 어선 금양98호가 침몰해 선원 2명이 죽고 7명이 실종되는 참극이 또다시 빚어졌는데도 군 당국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어복장(魚服葬)을 치를지 모른다는 부모 형제의 비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생환을 기원했건만 “살리지 못한다면 인양이라도 빨리 하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보수 언론이 내뿜은 냉혹한

독설들로 실종자 가족들은 ‘칼로 심장을 찢어 내는 고통 속에 심신이 망가져’ 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들은 “가족들의 야유와 통곡과 아우성이 이성을 잃은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보고 “내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라 합니다.

미친 놈들. 이성을 잃은 것은 너희 놈들이!

우파 언론들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높여 국민의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온갖 억측만 난무하는 것은 군 당국과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의혹들이 부풀려진

것도 정부와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해 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다고 김태영은 말했지만, ‘어떤 짓’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켜켜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남북의 경계선에서 사라진 장병들과 부모 형제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일입니다.

군대, 자본주의 체제의 괴물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에 “한국인들이 국가를 진짜 괴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옮겨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특히 괴물처럼 느낀 것은 군부였다.

트로츠키는 “군대는 사회가 앓고 있는 온갖 질병을 훨씬 고열로 앓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에서 나타난 거짓말, 비밀주의, 관료주의, 호전성의 핵심에 군부가 있다.

군부는 진실을 은폐하며 북한과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진원지 구실을 하고 있다.

군대가 보이는 이런 행태는 군대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군대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억압적인 폭력 기구다.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다.

군대는 경쟁 국가와 국내의 저항 세력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킨다.

한국 군대가 4·19와 광주항쟁 때 한 구실이나 지금 해외 파병을 통해 하는 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명은 하찮게 여겨진다.

물론 군대로 끌려 가는 것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다. 천안함 실종자들이 “돈 없고 뺨 없고 줄 없는 그런 서민들의 아들들”일 거라는 명진 스님의 지적처럼 말이다.

군대가 극도의 억압과 관료적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은 여기서 비롯한다.

평범한 노동자의 자식들이 군 장성들의 명령을 따르며 소수 지배자들을 위한 전쟁 준비와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려면 강력한 억압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 사고와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매년 2백여 명에 이르렀다. 의문사도 끊이지 않았고, 이번 사고도 의문사를 닮아가고 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조차 자본주의 군대는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선출되지 않는 군 장성들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른다. 천안함 사고는 이런 군대의 일면을 보여 줬다.

이런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평범한 노동자 부모들의 불안감과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인명 구조가 아니라 살상무기 마련에만 관심 있는 체제

이 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세계에서 살상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액은 8조 7천2백억 원이었다(이 돈이면 5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2009년 한 해 국방예산만 28조 5천억 원이었다.

이런 엄청난 돈으로 한국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온갖 최첨단 살상무기들을

마련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총기가 좌우로 휘어지는 굴절형 총”을 개발해 ‘벽 뒤의 적까지 사살하게 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군력도 증강됐다. 세종대왕함을 만들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가 됐고, 아시아 최대 크기라는 1만 4천 톤급 독도함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군이 자랑해 온 온갖 최첨

단 군함들은 전쟁 준비와 연습에만 쓸모 있는 것임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

한 실종자 가족은 “배가 천 척, 만 척이 있고 육해공군이 다 있어도 [감압챔버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사람 구하는 장비를 마련하는 데는 관심도 없었다.

수중 무선 전파 탐지 장치가 있고 체온 하락을 방지하는 발열장치가 부착된

특수 구명조끼가 있었다면 실종자 구조는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물에 젖지 않는 드라이 슈트가 있었다면 한주호 준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용산참사 살인 진압과 쌍용차 살인 해고에 앞장선 정부에게 사람을 구하는 구실을 기대하는 게 헛된 것인지 모른다.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marxism.or.kr

맑시즘20107월 22일-25일서울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60여 개의 포럼과 열띤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맑시즘은 올해로 10년째 열리는 진보 포럼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가장 열띤 포럼입니다. 끝나지 않은 위기의 시대, 저항의 사상을 물려받은 뜨거운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60여 개의 포럼과 문화 행사가 어우러진 정치적 축제

• 국내외 저명한 활동가와 진보적 학자 · 저술가들의 강연

• 1천 5백여 명의 진지한 청년 · 학생 · 노동자 · 청소년 참가자들

•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민주적이고 열띤 청중적 토론

주최: 다함께

www.marxism.or.kr

02-2271-2395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5호(2010년 봄)

www.marx21.or.kr

정기구독 문의 02-2268-7608

특집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이면 _ 강동훈

이명박 집권 3년차 - 평가와 전망 _ 전지윤

금융화 테제와 장하준의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 비판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의 문제들 _ 정성진

유럽중심주의와 민족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와 동아시아 역사 _ 오언 밀러

현대 진보사상 조류

《더 레프트 1848~2000》 비평 _ 콜린 바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정책 _ 정진희

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 _ 장호중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의 정치경제학 _ 김어진

크리스 하먼을 기리며

한 투사의 생애 _ 이연 버철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를 비판하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 단일화에 갈수록 집착하고 있다.

5+4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4+4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에서는 진보신당을 빼고 야권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1일 유시민과 ‘손 맞잡고’ 민주당에 단일화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연대를 회피하며 4+4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진보 후보 단일화에 별 열의가 없다. 그 탓에 ‘진보 진영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 연석회의’(진보서울연석회의)가 서울 시의원 후보 둘을 단일후보로 선출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당 안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3월 21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선 이상규 서울시장 위원장이 단독 등록했는데도 65퍼센트밖에 지지를 얻지 못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이 후보가 반MB 야권단일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한 데 따른 반발이 있었던 것이다.

권영길 의원이 3월 30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강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진보신당 사이에서 ‘그래도 단일화 해야 한다’고 홀로 외치[는] ... 이런 구도는 잘못된 구도”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과 한쪽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인 이호성 씨(한국노총 조합원)는 민주노동당의 선거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연합해서!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몇 석 차지해도 [정체성은] 더는 ‘민주노동당’이 아닙니다. 당선을 위해 영혼을 파는 겁니다.”

박금석 전 지부장 직무대행을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고동민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 방침으로는 계급투표를 조직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평택시장 후보는 과거 시장



사진 제공: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유시민과 손잡은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노동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진보정당들이 손잡는 모습이다.

시절, 지역의 노조를 탄압한 잡니다. 한 나라당에도 있었구요.

“이런 사람을 놓고 [시장 후보를 내 주고 시의원 단독 후보를 보장받는] 단일화 논의를 하면 조합원들에게 계급투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운동의 ‘매개’인 울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3월 31일 현대차 4공장 차체4부 조합원들의 회식 자리를 방문한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는 스스로 “반응이 썰렁하네요” 하고 말해야 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조합원 다수가 “진보가 들어 나와 될 게 뭐 있노. [따로 나오면] 투표 문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정서를 내세우며 민주대연합을 정당화한다.

잘못된 구도

물론, 이명박 정부를 향한 반감은 아주 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을 정당화할 순 없다.

윤태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은 “반MB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반MB 동맹을 할 만한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말했다.

탄압이 심한 철도노조의 청량리역 연합지부 유균 지부장도 “민주당은 철도가 민주노조를 띄울 때부터 투쟁만 하면 탄압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죽어도 찍기 싫다”고 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면 두 주요 노동자 정당들이 진작에 진보대연합을 적극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구두선에 그칠 뿐 실천에서 진보대연합은 실종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방침도 다소 모호하게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 중 지지 서약서를 쓰고 단일화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진보정당들의 단결을 바라는 현장 조

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도부도 이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반MB연대 단일후보”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면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연합한 후보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신당이 독자 출마한 선거구에서 민주노총은 누굴 지지할 것인가.

쌍용차지부 고동민 조합원은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 선거연합은 총선·대선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재미 보면, [계속 이 구도로 갈 텐데] 대선 때까지 민주당 2층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에게 선거는 계급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요. 지금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예요.”

진보정당들은, 특히 민주노동당은 계급투쟁에서 노동자들을 분열·약화시킬 선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부활절 달걀 같은 뜻밖의 선물

지난 3월 한 달 동안 <레프트21>은 정기구독자들에게 전화로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의 감사 인사에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잘 몰랐던 것들인데, 다른 신문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 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속 시원하게 비판해 줘서 좋아요.”

좋은 신문이라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독자 한 분은 여태껏 보던 신문들과 많이 달라 자신의 관점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고, 공무원 노동자 독자는 “우리 노조가 탄압을 받고 있는데 <레프트21>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쌍용차 파업에 관한 평가나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었다며 마음에 들었던 기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었고, 신문의 주장이 “강성이라 좋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독료는 내가 내지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받아 보겠다. 동료들과 같이 보고 싶다” 하며 신문 받는 주소를 집에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전화까지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제 구독 기간이 곧 끝나던데 바로 입금할게요” 하고 정기구독을 연장하신 분도 계셨지요.

“안 그래도 봉투에 찍혀 오는 구독 만료 호수를 보고 구독 기간이 곧 끝나는구나 했어요” 하시며 잊지 않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 달라는 독자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매월 후원을 하겠다며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분들도 있었지요.

어려운 텐데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 덕분에 <레프트21>이 더 힘을 받았습니다.

독자들의 응원 말씀, 마음에 드는 신문이라 정기구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 애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며 매월 후원하겠다는 말씀이, <레프트21> 식구들에게는 우연히 거리에서 받은 “부활절 달걀”처럼 뜻밖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레프트21>이 쑥쑥 자라도록 독자 여러분이 저희의 햇빛이, 물이, 바람이, 자양분이 돼 주십시오. <레프트21>을 여러분이 직접 키워주세요!



구독·후원 문의 : 02-777-279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우리가 양보한다고 저들이 시혜를 베풀까

최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터터 대표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등은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모임을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지난 20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상이 대표 등의 제안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종래와 다른 방식의 실천” 때문이다.

이상이 대표 등은 “지금의 국가재정 규모가 너무 작”으니 지금 당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한다.

이들은 현재 1인당 약 2만 9천 원(가구당 8만 2천 원)인 보험료를 38퍼센트 가량 인상해 1만 1천 원(가구당 2만 8천 원)씩 보험료를 더 내면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면 ‘법적으로’ 기업주들도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돼 있고 국고 보조도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지난 20여 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병원과 제약회사로 흘러들어 가는 돈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올라도 그 대부분은 약가·수가 인상분을 채우는 데 쓰였다.

38퍼센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법적으로는 정부의 국고지원금도 증액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료가 각각 6.5퍼센트, 6.4퍼센트 오른 2007~8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예산 심의에서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둘째, 이상이 대표 등은 “우리 나라 건강보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다했거나, 지금이라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정적자는커녕, 오히려 대폭적인 급여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민주노총)

게다가 프랑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갑절 이상을 낸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네 곱절 가까이 된다.

유럽의 일부 복지국가들에서는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지만 건강보험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한국과 달리 이들 나라에서는 보장성 90퍼센트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그런데 이런 복지 혜택의 차이는 말하지 않고 보험료만 비교해 한국 노동자들이 유럽 노동자들처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기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형편없이 낮고,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그보다도 훨씬 적고, 정부가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을 모델로 삼겠다던

이상이 대표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복지를 늘리겠다는 조삼모사식 정책이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2007년 대선에서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동영의 ‘역동적 복지국가’ 제안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동영과의 정책연대를 염두에 둔 발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오건호 연구실장도 그가 속한 연구소의 상급 단위인 공공노조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의 연구실장이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험료 인상률이 무려 38퍼센트나 되고 그나마 노동자 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이 방안은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의료공공성 운동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 꿇고 지배자들과 싸우자는 꼴이다.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의 배신 이후 투쟁 과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노조 지도부의 ‘고통 전담’ 합의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금 현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합의는 한마디로 노예 계약서입니다!”

합의안은 연간 1천7백여 만 원에 이르는 임금·상여금 삭감, 5백97개 직무 도급화 등 대폭적인 양보를 담았다. 1백93명 정리해고는 워크아웃 이후로 ‘유보’됐을 뿐이고, 회사에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지도부는 ‘노조 동의서’도 제출키로 했다. 채권단의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줬다는 ‘항복 문서’에 스스로 족쇄를 찬 것이다!

따라서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진행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의 배신적 합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고광석 지도부는 워크아웃 기업에서 양보 말고는 무슨 대안이 있냐고 조합원들을 몰아붙여 왔다. 그러나 양보와 투쟁 회피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최악의 카드다.

1999년 대우차 워크아웃 당시에 노조 지도부가 양보 교섭에 매달렸지만, 채권단은 결국 눈 하나 깜짝 않고 1천7백50명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진정한 대안은 양보가 아니라, ‘공기업화’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

투쟁의 대안

사측과 채권단은 이번 합의안이 부결되면 아웃소싱 대상자를 포함해 1천2백여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진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복받치는 분노에도 부결 투표를 주저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금세 끊어질 썩은 동아줄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해고 대상자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언제 죽일



고통전담을 합의한 금호타이어 사측과 노조 지도부

지 시간만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해고는 계속 시도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1천5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부결 이후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해고나 양보냐’ 하는 두가지 악을 모두 거부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지도부를 뛰어넘는 독립적인 투쟁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탓이다.

그런 점에서, 금호타이어정리해고 철폐투쟁위원회(이하 금해투), 현장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자회 등의 지도부에게 아쉬움이 크다. 이들은 옮겨도 양보 교섭을 비판하며 협상안 부결을 주장했지만, 노조 지도부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3월 27일 금호타이어 노조가 간부파업에 돌입하고 지역 노동자들과 결의대회를 개최했을 때, 금해투 지도부는 회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선 양보에 얽매이지 말고 투쟁을 밀어붙이자고 호소하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광주지역의 쌍용차노조 활동가는 그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해투나 공대위가 확실히 투쟁을 조직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같은 집회에 조합원들을 동원했어야죠. 독자적인 것발도 만들어 갖고 나와야 합니다. 가대위도 조직해서 플래카드랑 팻말도 갖고 나와, 싸울 수 있다는 분위기를 활력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선언해 놓고도 양보 교섭에 매달리던 4월 1일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금해투 지도부는 노조 지도부가 끝내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줘야 했다.

그러나 금해투 지도부는 독자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노조 지도부의 교섭만 지켜보고 있었다. 중요한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교활하게도 노조 지도부는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다. 노조 지도부는 4월 6일 발표한 대자보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비집합이라면 침묵해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둔 지금,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자니 1백93명 해고 문제가 걸리고, 찬성하자니 굴욕적 양보를 인정하게 되는 잘못된 딜레마에 빠졌다.

일차적인 책임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노조 지도부에게 있다. 그러나 투쟁을 조직할 때를 놓친 금해투 지도부에게도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

노조 지도부가 배신적 합의를 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장의 불만을 조직할 책임이 이제 금해투 지도부에게 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금해투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측과 채권단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에 맞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금해투 지도부가 흑역 차지 선거에서 노조 지도권만 바라보고 당장의 과제에 소홀하면, 조합들의 불신과 실망을 사게 될 수도 있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발레오만도 투쟁

금속노조가 연대투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사측의 직장폐쇄로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난 지 두 달 가까이 됐다. 이미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자들은 세 차례나 연대파업을 하며 모범을 보여 왔지만, 탄압에 직면해 연대투쟁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서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은 3월 말부터 원청인 현대차·기아차 공장 앞에서 홍보전을 시작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전에 참가한 발레오만도 김상진 조합원은 현대차·기아차 활동가들의 연대가 “희망”이라며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지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 현장조직들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투쟁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경주 시내와 상가 곳곳에 “비정규직 없는 회사 끝까지 지켜 주세요”, “본 상가는 발레오 조합원들을 지지합니다” 등 지지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걸었다.

그러나 투쟁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은 생계 문제로 힘겨워 하고 있다. 사측의 비열한 협박과 회유로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복귀했다.

발레오만도에 연대한 ‘죄’로 경주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은 구속됐고, 경주지부 소속 주요 노조 지회장들도 고소·고발돼 있다.

따라서 투쟁이 더 장기화하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금속노조 지도부가 연대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이미 3월 12일 결의대회에서 “발레오 투쟁을 민주노총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경주지부도 조직을 추슬러 다시 연대파업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큰 형님(발레오만도)이 깨지면 아우들도 힘들다”는 경주지역 노동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도 적극 연대하겠다는 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발레오만도의 부품을 받지 말라고 사측에게 요구해야 한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노조 탄압하는 발레오만도 부품을 받지 말아야

나는 발레오만도 노동자들과 3월 30일 현대차 4공장 구경문에서 출근 홍보전을 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연락해서 몇 명이 함께 나와 유인물을 돌렸다.

저녁에는 현장조직 회원들도 5명 정도 참가해서 함께 홍보전을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홍보전에 함께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공장 내에서도 홍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대차지부는 ‘도요타 사태’ 이후 “품질보증이 고용보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진짜 품질보증을 위해 선 대체인력으로 생산하는 발레오만도 부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사측에 항의할 필요가 있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아래로부터 연대가 중요하다

발레오만도 조합원 8명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방문했다. 현장조직 ‘금속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발레오만도 동지들을 전체 모임에 초청했다. 투쟁 소식을 공유하고 출근 홍보전을 함께하기로 결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는 리플릿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했다. 발레오만도 동지들이 제작해 온 리플릿에는 기아·현대차 사지 말자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불매운동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 발레오만도 동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며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발레오만도 동지들은 그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환대를 받은 곳은 처음”이라며 아래로부터 연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MBC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MB 방송 장악에 저항

MBC 노조가 4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7일에는 지역 조합원들까지 상경해 1천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재철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황희만을 본부장에서 사퇴시켰다고 노조와 약속한 후, 한 달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노조를 우롱했다.

이 배경에 김우룡이 말했듯이 김재철을 “쪼인트” 깬 “큰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MB의 낙하산 김재철은 취임 이후 곧바로 <PD수첩> CP(책임PD)를 전격 교체하고, 정길화 PD<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획자를 평PD로 발령했다.

김재철은 “좌빨 척결”뿐 아니라 진주·마산 MBC 단독 사장 임명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도 착수했다.

게다가 김우룡 “큰집” 발언까지 폭로됐다. ‘월드컵에 맞춰 노동조합과



4월 7일 MBC 노동자 1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PD수첩>을 박살낼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김재철은 “무노동 무임금”, “[파업으로] 해고되면 복직은 없다”고 협박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파업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번처럼 김재철을 사장으로 인정하는 어정쩡한 타협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온갖 거짓말과 무능에 반감이 큰 상황에서 MBC 노조가 굳건히 싸운다면 또다른 ‘국민 지지 파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노조 웹사이트 등에 지지 글이 쇄도하고 있다.

YTN, KBS처럼 이명박 정부는 MBC를 장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BC 노조

와 언론노조도 모든 노력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

천안함 사고, ‘좌파 스캔’ 출출 압력,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의 “쪼인트”를 까서 내쫓을 기회다.

최미진·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중앙대 구조조정 반대 투쟁

징계 위협 속에 단식 농성을 시작하다

중앙대학교 당국은 지난 3월 23일 구조조정 최종안을 발표하며 학생과 교수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구조조정을 한번에 몰아치는 대신 단계별로 나눠서 우회하는 방식”(임지혜 총학생회장)을 택했다. 그리고는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한 이들부터 ‘손보려’ 한다.

우선, 3월 28일 문과대 독문·불문·일문학과 학생과 교수 등이 18일째 농성하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여기에 학생 징계까지 하려는 듯하다. 학생지원처는 임지혜 총학생회장 등 세 학생에게 공문을 발송해 ‘진술서’를 요구했다.

지난 3월 22일 교수, 학생 5백여 명이 모여 ‘학문단위 일방적 재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때 학생처 직원이 학생들을 채증한 데 항의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주식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출범식 당시 채증에 항의를 하며 기자에게 “학내 집회를 할 때마다 학생처가 사진 채증



중앙대 총학생회는 “자본의 이해가 반영돼 졸속으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을 해 학생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식 국장도 이번에 진술서를 요구 받았다.

중앙대의 한 학생회 활동가는 이런 태도가 “기업에서 구조조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노조 탄압으로 유명했던 두산이 그

수법을 학교에서도 쓰는 것이다.

총학생회장 등 공문을 받은 세 명은 진술서 요구가 부당하다며 작성을 거부했다.

총학생회는 징계 위협 속에서도 구조조정 반대 운동을 곳곳하게 펴고 있다. 4월 6일에는 총학생회 주도로 ‘구조조정안 폐기·기업식 구조조정 반대·학내 민주주

의 수호’를 내걸고 중앙실천단을 발족했다. 이날 김일건 부총학생회장은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다.

김일건 부총학생회장은 “[구조조정 문제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는 구조조정 반대 서명 운동도 시작해 학교 당국을 압박하고 4월 12일로 예정된 학생 총회로 힘을 모아 갈 계획이다.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학교 통폐합 최종안이 나왔지만 캠퍼스 재배치, 학과 정원 조정, 계열별 부총장 도입 문제 등 중요한 결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4월 3일 대 학생교육공동행동 집회에서 “중앙대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꼭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학교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닥칠 때도 해결하기 쉬워질 것이다” 하고 연설했다.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등록금 투쟁

한국외국어대 “총회 성사의 성과를 점거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은 등록금을 3.19퍼센트 올렸다. 그래서 2010년 등록금은 학기당 무려 3백43만 9천 원이다. 신입생 입학금은 1백3만 원으로 전국 1위다.

이런 무자비한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고 학생 1백여 명은 겨울방학 중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힘겨운 싸움 끝에 총장과 면담을 했지만 ‘학생들이 이해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점거를 유지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점거농성은 일단 중단됐고, 개강 후 한 달 넘게 총학생회, 단과대·과 학생회, 정기총회 성사 실천단 등이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다.

매일 아침 저녁 정문에서는 유인물을 정성스레 나눠 주는 실천단 학생들 20~30명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학생회관 앞에서는 커다란 펼침막을 걸고 학사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해 1천



4월 7일 1천70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성사한 한국외대 학생들

7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했다. 지난 4월 3일 열린 대학생교육공동행동에도 50명 넘는 학생들이 참가해, 그 열기를 더했다. 4월 7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는 전체 성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1백10여

명이 참가했다.

이런 노력으로 4월 7일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학생총회에 재학생 8천5백 명 중 1천70명이 참가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투쟁을 이어 가자’ 하는 학생회장들

의 발언은 큰 호응을 받았다.

총회 후 다 함께 본관으로 향했다. 학생들의 결의안을 학교에 전달하고 등록금 동결 연원을 담아 하늘로 풍선을 날렸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분 환불, 경쟁을 강화하는 학사제도 개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정상화, 재단의 민주적 운영, 정부의 등록금 인하 대책 마련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이후에 총학생회는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총투표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전체학생총회 성사와 이후 이어진 투쟁으로 신입생 등록금을 재학생보다 많이 받는 ‘차등책정제’를 없앨 수 있었다.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학생들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총회 성사의 성과를 이어 대중적 점거 등으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재권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승실대 1천3백여 명이 총회에 참가해 등록금 동결 요구

“정족수인 1천2백 명이 넘게 모여 학생총회가 성사됐습니다!” 승실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뜨겁게 환호했다. 3월 31일, 비가 오는데도 1천 3백50여 명이 학생총회에 참여했다.

승실대학교는 올해 등록금 4.8퍼센트, 입학금 10만 원을 인상했다. 학교 당국은 “돈이 있어야 발전한다”며 지난해만 해도 예산을 뺏기며 3백20억 원을 남겼지만, 교육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

았다.

“돈만 바라는 학교” 때문에 학생들의 고통은 커져 왔다.

한 사회복식학과 신입생은 “매일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3~4시간 자고 학교에 옵니다. 빔 때문에 시름시름 앓지 말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총회 참가 이유를 말했다.

승실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고통을 대변해 등록금 투쟁을 조직해 왔다. 1천

여 명이 환불 요구서를 작성했고 5대 요구안 서명에도 1천5백 명이 참가했다.

총회 날은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단식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학생회장들과 실천단은 “등록금처럼 터져나오는 팝콘”을 나눠 주며 매일 홍보전을 하고 총회 참가를 호소했다.

그런 노력으로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총회 직후 총장과 학생대표단이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학교측은 학생들이 요

구한 5대 요구안 중 등록금 분할납부 횡수 늘리기, 학점이월제 도입 등 학사제도 개선, 장학금 확충, 1백여 개가 넘는 교육복지 요구안들을 들어주기로 했다.

학교측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등록금과 입학금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점거 투쟁을 통해 학교를 더 압박할 필요가 있다.

정선영 기자 susumul@left21.com

인하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

4월 1일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인하대는 2년 연속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는 적립금을 1천2백억 원이나 쌓아 두고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총회 장소로 모여 들었다.

1천5백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였지만, 개회에 필요한 1천8백 명에는 못미쳐 학생총회를 개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어도 위임장

으로 뜻을 함께한 학생들이 3천 명이 넘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학교를 향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의문 낭독 후 학생들은 본관으로 향했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요구안 관철!’이 적힌 팻말을 현관 곳곳에 붙였다.

이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자리였고,

더 큰 싸움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

총학생회는 “학교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본관 점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3일 열린 대 학생교육공동행동에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버스를 대절해 수십 명이 참가했다.

오선희 인하대학교 학생

숙명여대

“‘빅 시스터’를 거부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3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학칙 개정안 찬반 총투표를 했다. 재학생 약 1만 명 중에서 4천9백47명이 투표했고, 93퍼센트에 이르는 4천1백40명이 총학생회가 제시한 학칙 개정안에 찬성했다.

총학생회가 학칙 개정안 찬반 총투표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숙명여대 당국이 학교를 비판하는 학생, 촛불시위에 가자고 호소한 학생 등의 신상을 추적한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사찰을 한 당시의 학생처장은 총학생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행복한 학교”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총학생회는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학칙이 이런 감시와 통제를 ‘합법’으로 뒤킴침한다며 학칙 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권한, 학내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양심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부당한 사찰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넣었다.

기존 학칙을 보면 열 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할 때, 교내에 광고를 붙이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때, 외부인사를 초청할 때 모두 미리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나 동아리가 붙이는 게시물도 모두 ‘도장’을 받아야 한다.

총학생회는 “사전검열을 통해 학교(방침)에 위배되거나 사회참여적인 이야기를 할 장을 차단하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동아리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고초를 겪은 언론계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하려다 학교 당국이 장소를 내 주지 않아 큰 곤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란 각서를 쓰고서야 장소를 빌릴 수 있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런 실태를 비꼬아 숙명여대 당국을 ‘빅 시스터’라고 부른다.

사전검열

학교 당국은 ‘빅 시스터’답게 총투표가 학칙에 없는 활동이라며 투표를 홍보하는 펼침막과 게시물들을 모두 떼 버렸다. 학교 웹사이트에도 총투표에 참가하지 말라고 공지를 올렸다. 투표 진행에 필요한 재적인원 수를 알려 달라는 총학생회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4천 명 넘게 학칙 개정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말 반가운 결과다. 강보람 총학생회장은 “모든 단과대, 학과 학생들이 끝고루 투표에 참가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단한 노력이 뒤따랐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학내 거의 모든 학생회 활동가들을 만나며 학칙이 부당함을 알렸다.

이렇게 개정안은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총학생회는 이런 지지를 발판으로 학교 당국을 압박할 생각이다.

또, 사찰 피해 학생 8명이 모여 숙명여대 당국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시작했다.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4월 19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교사와 학교 행정직원의 단결을 위해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교원평가제가 아닌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런데 전교조 활동가들의 교사의 '잡무'에 대한 태도에는 이견이 있다. 교사들이 말하는 '잡무'는 학생 성적 처리나 상담 등 학사, 수업에 필요한 일이나 예결산에 관한 행정, 교육청 공문 처리 따위의 업무들이다.

이런 일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비하면 부차적이기는 하나 학교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다. 교사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일

들을 '잡무'라고 폄하하는 것은 이 일들을 주로 수행하는 학교 행정 직원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다.

교사의 잡무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비교사 교직원들이 함께 정례 교직원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또, 교원에게만 한정된 학교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교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으로 확대하도록 함께 투쟁한다면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와 행정실 직원 간 연대는 한층 확대될 수 있다.

학교에서 직원간 위계질서는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됐다. 전교조가 합법화할 때, 정부는 교원과 직원의

단결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노조법으로 교사들만의 결사를 허용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행정직원은 법적 고용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리다 보니, 직원들은 "교장의 명"에 따라 온갖 궂은 일을 강요당한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지만 비교사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더 심하다. 직원 수의 대부분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더욱 심해졌고, 부족한 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용역 직원으로 채워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확충 요구는 직원들도 환영하는 일이다. 정부의 교원업무 경감 대책은 행정 직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정원 확충과 행정실 직원 총원 ·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공무원화) 요구는 만날 수 있다.

이런 연대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자들이 교사 · 직원 연대를 교육 현안으로 함께 토론하고 공동으로 행동을 도모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범현

4대강 공사현장 방문기

아이들아, 청둥오리아, 단양쭉부쟁이야. 아프지 마. 우리가 구해 줄게!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강의 눈물' 뮤직비디오 촬영에 우연히 함께하게 됐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밴드 '원디시티'와 최진성 독립영화 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남한강 여주 지역에 가서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왔다. 남한강 여주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풍경이 아름답고 고와서 '여강'이라 불렀다 한다. 이곳엔 일명 '도리섬'과 '바위늪구비'로 불리는 빼어난 습지가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 위기종인 '단양쭉부쟁이',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있고, 작은 호랑이라 불리는 '늑'의 흔적도 발견된다고 한다.

사람의 몸이 수술대 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칼로 파헤쳐진 모습처럼 아름다운 시골마을 강변이 수많은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지고 콘크리트로 막힌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사람의 몸은 70퍼센트가 물이다. 강물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고, 인간도 맑은 강물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 교민들이 독일에서 이미 시행했다가 모두에게 피해를 준 이 판박이 공사를 막기 바라며 국민소송비를 모금했다는 소식은 참 반가웠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들이 해맑음을 잃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종교인 · 학생 · 노동자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두현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레프트21〉 지난 호 논설 '사방에서 반발에 부딪히는 이명박 정부'를 잘 읽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좌파 교육 때문이라는 안상수의 발언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더 관련 깊다"는 논설의 구절은 아동 성범죄를 다룬 같은 호 기사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의 주장과 모순으로 느껴진다. 이 기사에서 정진희 씨는 "성범죄 대부분이 가족, 친척, 친구 등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전체 아동 대상 성범죄 중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기반으로 통계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낮은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실제로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 친족이 저지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신고될 가능성은 그 특성상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피해자 상담 · 지원 센터 조사는 신고 접수된 사건이 아닌 상담 사건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좀더 신빙성이 있다. 얼마 전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낸 통계를 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85퍼센트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고 이중 친아버지, 양아버지, 할아버지, 친척 아저씨가 가해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호 논설이 아동 대상 성범죄가 '가난한 재개발 지역의 무서운 빈집에서 낯선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통념에 기초해 CCTV 설치나 동네 기동 순찰대 증강 등의 치안 강화 방안들이 마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이예송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우리를 ‘나쁜 피’로 만든다

요즘은 거리를 다닐 때마다 랭보의 'mauvais sang(나쁜 피)'라는 시제가 자주 생각난다. 나쁜 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거의 역울할 지경이다.

영어는 필수고 중국어, 스페인어는 옵션. 도서관에 가 보면 '토익900' 류의 두터운 영어책을 손에 든 대학생들이 괴로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다.

88만 원 세대. 스펙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그의 실질적 인간됨보다 자소서(자기소개서) 한 장에 적힌 학점과 이력들 — 자격증은 많으

면 많을수록 좋다 — 의 개수가 중요하다. 사람의 질은 나온 대학의 이름값에 달렸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론 교육이다. 인간은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의 전반을 창조해 낸다. 케네디는 교육은 진리의 씨 뿌리기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육의 현장에서 진리 탐구는 없고, 학생들은 대학을 위한(미래에는 기업을 위한) 기계가 된 지 오래다. 입시의 최전선인 고등학교

에서는 모의고사 등급표의 쪼개진 숫자가 아이들의 기분을 좌우한다. 아이들은 몇 명을 더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계산하며 나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옆 친구를 노려본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매우 정형화돼 있다. '정답이냐/정답이 아니냐'.

덕분에 한국 청소년들의 입은 달렸고 사고는 정지됐다. 대학의 구술면접조차 아이들은 비싼 사교육비를 들여 '답'을 제공받고 달달 외워 가야 한다.

부모들은 행여나 옥조 같은 자식에게 해가 될까 달달이 몇 십만 원씩, 많게는 몇 백만 원씩 지불하며 허리가 휘는 것을 감내한다. 그리고 속으로 버거운 현실의 숨을 삼킨다.

이것이 한국이고 이것이 우리를 '나쁜 피'로 만들었다.

극명한 현실의 갈래에서 나는 외친다. 나는 '나쁜 피'를 가지지 않았고, 아니,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

오나영

감옥에서 온 편지

쌍용차 투쟁을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으로 현재 수원 구치소에 있는 조합원 김정운이라고 합니다.

8개월 여 구치소 생활 동안 언제나 잊지 않고 찾아 주는 〈레프트21〉이 있어 외부 소식을 꾸준히 접하고 있으며, 그 고마운 마음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투쟁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신문인 〈레프트21〉이 함께하고 있어 노동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투쟁에 함께하고 지지했던 것에 감사하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창간호 신문을 펼쳐 보면서 “참 색다르다”고 느끼고 신선했던 마음으로 읽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1주년을 축하드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의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욱 발전하는 〈레프트21〉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김정운 드림

〈레프트21〉의 후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정진용이라 합니다.

인간답게 살수 있는, 노동자 · 서민이 걱정 없는, 아니 탄압과 핍박만이라도 당하지 않는 세상을 원하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 다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자본은 고소고발과 손배 가압류 남발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측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2월 18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처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의 발빠른 대응과 현장 동지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더불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분들의 지원까지 받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사실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일도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레프트21〉 신문 덕분에 많은 이야기 볼 수 있어서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조중동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레프트21〉 같은 밝은 언론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에 커다란 위안을 삼고 〈레프트21〉 관련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수원구치소 정진용 올림

사회주의 투사들의 주장을 담은 〈레프트21〉

2주에 한 번 투쟁하는 국내외 노동자들의 소식, 국내외 사회주의 투사들의 주장과 이론 등을 실은 〈레프트21〉을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TV 뉴스와 보수 신문에 나오지 않는, 그나마 보수적이지 않다고 평가받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불충분하게 나오거나, 나와도 노동자의 입장으로 해석되지 않는 우리 투쟁의 기사들을 볼 수 있어 〈레프트21〉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프트21〉에 안정적인고, 풍부한 기사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저 또한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견결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춘천교도소

이동우(기아차 화성 사내하청 노동자) 드림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입장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불황기의 정치경제와 노동자 투쟁

연사: 정종남 (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연락: 02-447-0397 | 010-9372-2746

서울 남부 사회포럼

풍요 속의 빈곤 —

왜 21세기에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연사: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빌딩)

참가비: 4천 원

연락: 010-2401-1987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마르크스 경제학 입문]

자본주의는 왜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연사: 이상우 (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학역 4번 출구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연락: 070-8113-8541 | 010-8481-2626

서울 서부 사회포럼

[초심자를 위한 마르크스 경제학 2]
기업가인가 노동자인가 —
세상의 부를 누가 만드는가?

연사: 김정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4월 23일(금)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충대입구역 2번 출구 2분 거리)

참가비: 3천 원

연락: 02-324-3400 | 010-7214-1157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코펜하겐 회의와는 다른 대안 건설하기

장호중 기자 rednuc@k21.com

4월 20~22일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가 열린다.

저명한 환경운동가 빌 맥키벤은 이 회의의 의의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기후를 구하기 위한 투쟁에 에너지를 불어 넣는 볼리비아에 축복을, 세계 지도자들을 지도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그것은 투쟁이 될 것이고 지금 시작될 것이다.”

빌 맥키벤은 1989년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경고한 최초의 대중서 《자연의 종말》을 썼고, 350.org를 창립했다. 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과학자 집 헌센,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 《수탈된 대지》를 쓴 에두아르도 갈레이노 등과 함께 코차밤바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파블로 솔론 로메로 주 유엔 볼리비아 대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를 비판하며 코차밤바 회의의 참가를 전 세계 정부와 사회운동 단체들에 호소했다.

“코펜하겐 합의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6퍼센트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교토협약은 선진국들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코펜하겐 합의대로라면 그들은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 서 각자 정한 목표대로만 하련 된다.

“이들의 합의대로라면 앞으로 지구 온도는 3~4도 이상 높아질 것이고 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에게 협상의 핵심 이슈는 금융, 탄소 시장, 국과 기업 경쟁력, 사업 기회 같은 것들뿐이다. 놀랄게도 이들은 협상에서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방법을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파블로 솔론은 90여 나라에서 1만 명 이상이 코차밤바에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신자유주의 단체 남반구조점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의네트워크와 농민 단체인 비아캄페시나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사회운



2009년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 회담장 앞에서 행진하는 볼리비아 원주민들

동총회를 호소하고 있다. 과거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린 사회운동총회는 국제 반전운 동과 대안 세계화 운동을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 바 있다.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NPA)도 코차밤바 회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차밤바 회의는 12월에 열리는 멕시코 유엔기후회의를 앞두고 유리한 세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안테스와 아마존 원주민들은 오늘날 기후변화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 중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반세계국주의적 민족해방투

쟁과 사회 계급적 투쟁을 벌여 온 볼리비아고 원 지도 농민 조직과 브라질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 볼리비아·페루·에콰도르에서 다국적 석유기업에 맞서 투쟁해 온 운동들이 코차밤바 회의에 참가한다. 이것은 이 회의에 분명한 반세계국주의적 내용을 부여할 것이다.”

축복

영국의 기후변화협패인 소속 노동조합들은 녹색 일자리와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단체들도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열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지난 3월 29일 코스타리카에서 ‘기후변화 관련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포럼’을 열었다. 이들은 시장 논리를 근거로 삼는 지구온난화 대책들이 원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시장 논리를 근거로 삼는 대책들은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땅을 건설하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석유를 캐내고, 목재 플랜테이션과 단일 작물 재배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이는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주최측은 이번 회의의 최대 주제가 ‘세계 기후변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표에 20억 명이 참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식 포럼 중에는 ‘구조적 원인’과 ‘기후부채’에 등록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코차밤바 회의에는 사회운동 단체들, 환경 단체들 같은 운동 단체들뿐 아니라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를 비롯해 50여 나라에서 정부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22일 코차밤바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패막식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상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 중국 정부는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이 회의에서 일정한 구실을 하려 할 수 있

다.

그러나 운동 단체들과 정부 대표단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파블로 솔론도 “모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펜하겐에서와 달리 개방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기존 유엔기후협약을 대체할 대안을 만들려고 코차밤바로 모여 들고 있다.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 회담장에서 선진국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코차밤바는 운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정부들은 코차밤바 회의 결과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에 참가하거나 시위를 벌였던 몇몇 국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이번 코차밤바 회의에 참가하는 데는 소극적인 듯 하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코차밤바 회의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당장 이를 강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차밤바 회의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전 세계적 기후정의 운동을 계승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의 무책임과 무능에 항의하며 행진한 10만 시위대는 더는 정부들에게만 의지해서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아래로부터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코차밤바 회의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여러 사회운동들과 기후정의 운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런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건설하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생태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교사

흔히들 마르크스주의와 생태는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관계라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주의를 반(反)생태적이라고 보는 세 가지 비판에서 비롯한다.

첫째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만 인식하는 인간중심주의다. 둘째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기술중심주의와 생산성중심주의다. 셋째로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보다 환경이 더 심각하게 악화했다.

심층(근본) 생태주의는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변형은 인구가 현재보다 현격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충분하다. 동식물들의 변형을 위해서도 인구가 줄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환경 문제의 주된 원인을 인구 증가에서 찾는 신멜서스주의와 유사한 주장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과잉인구는 …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관계로써, 결코 추상적 숫자나 생활필수품 생산의 절대적 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산 조건이 부과하는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멜서스의 〈인구론〉을 비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생산성 증대는 자본의 자기 증식에 따른 것이지만 인간 욕망의 증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깨진 순환 고리를 부분적으로 임계용량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물질대사 균형이 발생하는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순환 고리

다음으로 성장 한계론을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은 생산력 발전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설명한 마르크스주의는 환경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생산력주의가 필연적으로 생산 ‘자상’주의 또는 ‘나쁜’ 생산주의로 이어지거나 생산성의 지속적 발전 자체가 환경 위기를 낳는다는 주장은 생태주의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성장,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과 결국 만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생산력 일반과 특수한 사회 형태의 생산력을 구분하지 않은 채 생산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어떠한 사회적 상태에서 생산력이 발전하느냐, 그 생산력이 어떻게 사회화되느냐, 그 생산력을 누가 통제하느냐,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역사를 설명했다.

반면 일국 사회주의론에 근거한 스탈린주의는 생산력 발전 단계를 도식적으로 설정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생산성중심주의로 곡해한다. 따라서 레닌 사후 ‘일국 사회주의’를 추구한 스탈린주의와 국제 사회주의에 기반한 마르크스주의는 전혀 관계없다.

스탈린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 악화는 스탈린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님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노동관계, 생산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해답도 생산과 자본주의 관계의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

계급 사회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인간 사회의 착취와 억압과 자연 황폐화를 동시에 낳는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철폐돼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회적 생산-소비-분배를 계획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형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단초가 된다.

계급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을 촉진하는데, 이는 인간과 토지(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파괴한다. “폐결핵과 폐렴들이 자본의 필요조건”이듯 “토지 고갈과 자연생태계 오염” 역시 자본 축적에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생산의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자본 축적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와(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논리가 충돌한다. 인간의 필요 충족이 아니라 이윤 추구가 생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생산성 증대는 자본의 자기 증식에 따른 것이지만 인간 욕망의 증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깨진 순환 고리를 부분적으로 임계용량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물질대사 균형이 발생하는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4대강을 “큰 어항”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



2010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

지자 이명박은 그 이유가 ‘환경친화적인 4대강 개발 사업’을 충실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위 관료들에게 호통을 쳤고, 이 사업이 자신의 소신이나만큼 절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무총리 정문찬은 천안함 회생자 유족을 뒤로한 채 공사현장을 찾아 “큰 어항”을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득에 나섰다.

넉 달 전만 해도 강이 “시멘트 어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던 그가 이 사업의 실체를 “큰 어항”이라고 밝힌 것이다.

넓은 사고방식

문제는 설명과 설득이 아니다. 제아무리 충실히 설명해도 거짓은 거짓이고 파과는 파괴다. 4대강 사업은 탄생부터 거짓과 함께했다. “대운하 사업”의 이름표만 바꿔 낸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추진본부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일 중천 금식 기도를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효율성 보여 줘”

대한불교 조계종이 4월 17일에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4대강 운하개발사업저지 특별위원회’의 지관 스님(사진)은 이 행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엄청난 게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동령 한 사람의 잘못된 국정철학과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봅니다.”

지관 스님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부가 의한 4대강 살리기는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위주의 파괴와 훼손 위주의 토건책 배불리기 사업입니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려면 지류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4대강으로 흘러가는 오수와 폐수를 차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출발점부터 다르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심 중 하



나가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려면 여러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면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그냥 동시에 하련. 짧은 기간 내에 다 해버릴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좋다는 거죠. 이런 효율성 얘기는 천박합니다. 이런 천박함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 정책 운영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건대 대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불살생’이라는 불교 교리와 근본에서 배치됩니다. 어떻게 강을 파괴하고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까? 강은 취수원이잖아요. 아마 이대로라면 상상으로 못할 파면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관 스님은 정부가 이런 행사를 막으려고 스님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부 각처에서, 심지어 국정원과 정보 기관 쪽에서 이날 행사에 동

참하지 말도록 하는 각처에서 스님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 압박을 받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고위 관료들에게 ‘설득하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렇게 설득할 만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좋은 일이고 정당성 있는 일이라면 왜 국회의원이나 종교인들이 현장에 가는 것을 막고 사진 찍는 것도 금지하고 아예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면 고소·고발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최근에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지금 와서 설득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정말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호중 기자 rednuc@k21.com

4·19 혁명 50주년

한국 최초로 민중이 독재자를 내쫓은 혁명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또 양심이란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소외되거나 배척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만이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1959년 11월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 작성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폴름 보고서〉는 당시 한국 상황을 위와 같이 묘사했다. 이처럼 1950년대 말 한국은 정말 심각한 정치·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다.

“못살겠다. 갈아 보자”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의존해 성장했다. 미국의 원조 비중은 1957~1961년 기간에 국민총생산(GNP)의 13~14퍼센트였고, 재정 규모에서는 50퍼센트를 넘나들었다.

이승만 정권은 해방 이후 정부 소유로 바뀐 일본인 재산을 헐값에 넘기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자본가들을 육성하는 한편, 제분·제당·면방직 공업 등 ‘3백(白) 산업’으로 불리는 소비재 부문의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같은 재벌들이 성장했다. 1953년에서 1960년 사이에 15대 재벌의 자기자본은 54곱절이나 증가했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1957년 3억 8천만 달러에 이른 미국의 원조액은 1959년 2억 2천만 달러로 줄었다.

원조 감소와 과잉투자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다. 1959년 ‘3백 산업’의 가동률은 제분 23.3퍼센트, 제당 26.3퍼센트, 면방직 70.8퍼센트에 그쳤다.

당연히 실업자는 급증해 1960년 총실업률이 34.2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직업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괜찮은 것도 아니었다. 1957년 〈동아일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이 2만 환가량으로 세대당 생계비 4만 환의 절반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민중은 이런 생활고뿐 아니라 독재 정권의 억압 정책에도 신음했다. ‘발체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치 강패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이승만 비판 세력에 테러를 가했고, 중고등학생들은 특하면 반공집회와 이승만을 지지하는 관제 행사에 강제로 동원됐다.

민주노조와 좌파 조직 들은 한국전쟁 이후 전멸했고, 대신 어용노조와 반공단체 들이 득세했다. 부정부패도 너무 만연해서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사회 ‘지도층’이 포함된 비리 사건도 터져 나왔다.

민중의 고통과 환멸은 더욱 커져 갔다. 이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못살겠다. 갈아 보자” 하는 구호로 나타났다. 당시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이 28퍼센트를 얻었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 이기붕 후보가 떨어졌다.

“좋은 소라고 준 것”

독재를 지속하려는 이승만은 정권을 향한 비판과 저항을 온갖 억압 정책을 동원해 억누르려 했다. 진보당을 해산했고, 당수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국가보안법을 개악했다. 야당 목소리를 대변하던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했다.

이런 조치들은 민중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독재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상황은 혁명 전야로 달려가고 있었다.

민심을 잃은 독재자가 이제 권력을 유



어린 학생까지 참가한 거대한 시위는 결국 독재자를 물리쳤다.

지하러면 부정선거 외엔 방법이 없었다. 이승만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4할 사전투표’, ‘공개투표’ 등 사상 유례없는 부정을 저지른다. ‘4할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40퍼센트를 자유당 표로 만들어 미리 투표함에 넣어 놓는 것이다.

야당 후보의 등록을 막기도 했다. ‘서류 미비’를 이유로 민주사회당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반독재민주연맹의 입후보 서류는 ‘과한’들이 강탈해 갔다.

선거운동에서 일어난 부정은 더욱 심했다. 민주당이 유세하기로 한 공원에서 갑자기 토목 공사가 진행돼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학기말 시험, 토끼 사냥, 임시 수업, 졸업생 송별회, 무용발표회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일요일에도 등교하게 했다. 학생들이 분노했음은 물론이다.

야간은 물론이고 대낮에도 테러가 빈번했다. 그런데도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고 했다.

부정행위가 너무 심해 선거일인 3월 15일 전부터 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 8백여 명은 “학교를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투표 하루 전날에는 서울, 부산, 포항, 인천, 원주, 문경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군대에서는 유권자 수의 1백20퍼센트가 이승만에게 표를 던졌다! 독재정권은 이승만의 득표율은 80퍼센트, 이기붕은 70~7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최종 결과는

이승만 88.7퍼센트, 이기붕 79퍼센트 득표로 나타났다.

선거 당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터져 나왔다. 경찰은 총을 쏘 7명을 살해했다.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이에 대해 “좋은 소라고 준 것 아니냐?” 하며 발표는 문제없다고 했다.

독재정권은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공산주의자의 소행으로 몰아갔다. 시위 체포자를 남포당원으로 조작하고 살해당한 학생 호주머니에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쓰인 전단을 넣었다. 한국전쟁 이후 “도전할 수 없는 원칙의 차원으로 승격”(김동춘)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무마하려는 속셈이었다.

피의 화요일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교복차림의 시체가 떠올랐다.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실종 27일 만에 발견된 것이다. 최루탄 겉면에는 ‘군중을 향해 쏘지 마시오’ 하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3만 명이 시청, 경찰서, 파출소를 습격해 기물을 부숴다. 15만 명이 모여 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시위의 성격은 부정선거 규탄에서 이승만 퇴진으로 나아갔다.

투쟁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졌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마산 사건 책임자 처벌, 경찰의 학원개입 중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 시내에서 시위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정치 강패들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삽 등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습격했다. 이 소식은 다른 학생들

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4월 19일,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교생, 여중생까지 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자유당의 나팔수 〈서울신문〉 사육과 반공연맹, 자유당 본부 건물은 불기둥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내 거리는 시체와 피로 뒤덮였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저녁 7시부터 통행이 금지됐다. ‘피의 화요일’ 하루 동안 경찰은 1백 11명을 살해했다.

이승만은 국무위원 총사퇴(21일), 이기붕 부통령 사퇴 ‘고려’(23일), 이승만 자유당 총재 사퇴(24일), 구속 학생 전원 석방(25일) 등 일련의 양보 조치로 사



민중이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다.

태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민중의 분노를 막기엔 너무 늦었다. 25일 대학 교수 수백 명은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는 팻집막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26일 다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초·중·고·대학생까지 “국군 아저씨들, 부모 형제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며 참가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대법원장 조용순은 “4·19 시위는 순수한 운동”이라 했으며, 계엄사령관 송요찬도 “희생자는 나라의 보배”라고 했다.

독재자를 후원해 온 미국은 이 상황에서 “데모가 민중의 분노의 반영이라고 믿는다”(미국 국무장관 허터)며 이승만 사퇴를 종용했다. 4월 26일, 압제자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무능

자본가 야당인 민주당이 4월 혁명 이후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았지만, 자유당 못지않은 무능과 부패를 보여 줬다.

민주당은 혁명의 성과를 발전시키기는커녕 ‘굴러들어온’ 권력을 독식하려고 심각한 내분에 빠진다. 오히려 “혁명 과업은 완수되었으니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라”며 투쟁의 에너지를 잠재우려 했다. 이 때문에 민중의 불만은 매우 높았다.

그런 불만들은 혁명이 국가 권력을 이완시켜 만들어 낸 공간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혁신정당 운동, 학원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등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도 탄력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노조 민주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싸웠다. 1960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의는 60여 건이었지만 4·19 이후 12월까지의는 4백54건으로 크게 늘었다.

196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은 노조를 3백88개나 새로 만들었다. 노조는 총 9백14개로 전년(5백88개)에 비해 64퍼센트 늘었다.

이런 저항과 급진화 분위기를 억누르려 민주당 정권은 데모규제법과 반공법을 도입하려 했고, 민중은 이에 다시 저항했다.

영감과 교훈

그러나 4월 혁명의 열기와 정신은 결국 박정희가 이듬해 5월 16일에 일으킨 쿠데타에 짓밟혔다. 민주당 정권이 혁명의 요구를 철저히 배신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혁명을 계승한다고’ 내세워 혼란을 조장하면서 반혁명을 성공시켰다.

4월 혁명은 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정치적 구심 구실을 하는 조직은 없었다. 더구나 자본주의 생산을 멈출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에 취약했다. 이는 노동자 대투쟁이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한 1987년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중이 독재자를 내쫓은 투쟁은 위대한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특히,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용기는 지배자들의 뇌리에 섬뜩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며 갖은 반민주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반세기 전의 투쟁은 여전히 많은 영감과 교훈을 준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② – 베네수엘라 편은 지면 사정으로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 경선

최홍이 후보, “교육 비리에 비타협적으로 싸워 왔다”

김인숙

많은 사람들이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지난 1월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출범했고, 현재 1백8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추대위 예비 경선에 최홍이, 이부영, 광노현, 이삼열 후보가 출마했다. 유감스럽게도 박명기 후보는 추대위와 후보들이 합의한 경선 규칙에 불복해 이탈했다.

진보 교육감 예비 경선에 참여한 네 후보들은 모두 우파적 후보들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낫다. 따라서 다함께는 다섯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하든 그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이왕이면 가장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해 싸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최홍이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교육감으로서 제가 적임자인 이유는 먼저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학벌 권력이 정치·경제 권력입니다.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변호사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의사 아들은 의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홍이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빌어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를 비판했다. 최 후보는 검정고시 출신이다.

“제가 처음 발령을 받아 영등포구에 갔는데, 교장이 대뜸 야간반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제가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학생이 <엄마



3월 10일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 후보(가운데)

를 부탁해> 쓴 신경숙 작가입니다. 신경숙 작가가 쓴 자전소설 <외판방>이 언젠가 수능 모의고사의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문에 제 이름 석자가 나오는데, 그게 평가원으로부터 제가 유일하게 혜택을 입은 것이었습니다.(웃음)

“그렇게 야간반을 맡기 시작해 33년간 평교사로 재직하면서 저는 한 번도 고3 담임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벌이 없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학벌

최홍이 후보는 스스로 “사회적으로 이름이 없”지만 “알려지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 행사에 참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의지할 곳 없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학부모 들을 만납니다. 제가 대우하지 않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시 교육청 시정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홍이 후보는 김경희 교육감 대항[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얼마 전 사퇴했다]을 날카롭게 공격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3대 현안을 꼽자면, 교교선택제, 서울 교육역사상 유례없는 수백 명의 자사고 입시 부정, 교육 비리입니다.

“교육 비리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비리 신고자 1억 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비리로 징계를 받은 7급 공무원이 얼마 전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서 신고하면 나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받았고, 김경희 교육감 대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때 이부영, 박명기 위원들이 조금만 거들어도 좋았을 텐데, 두 위원들은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주최하는 서울교육청 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안민석 의원실에서 저를 섭외하려고 연락을

해 와서 저는 시정질의와 겹치니 날짜를 조정하지 않으면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토론회 일정이 조정되지 않아 제가 못 가게 됐고, 이부영, 박명기 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두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교육 운동 활동가들도 한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최홍이 후보도 자신이 교육 비리에 비타협적으로 싸워 왔다고 말했다.

“제가 창호공사 비리, 방과후학교 비리, 부정합격 장학사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부정합격 장학사 비리의 경우, 지난해 여름 장학사 합격이 뒤바뀐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담당관을 시켜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류를 위조해서 엉뚱한 사람이 장학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정합격 장학사 비리를 파헤친 것을 시작으로 서울 교육청 인사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운동 활동가들이 말하는 최홍이 후보

내가 만난 교육 운동 활동가들은 이 구동성으로 최홍이 후보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최홍이 후보는 교육청 비리를 폭로하고, 일제고사 거부로 징계 받은 교사 7인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며 방어했다.”

“3월 22일 주경복 선거를 도운 교

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공정책의 3심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징계위를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들을 방어하는데도 최홍이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또 다른 교육 운동 활동가는 최홍이 후보가 교육 비리를 파헤치는 데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최홍이 후보는 평교사 출신으로 청렴하게 활동해 왔다. 처음에 서울시 교육위원을 제안할 때, 생계 문제로 고심할 정도로 청빈하게 사셨다. 인사 청탁, 예산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

“평교사로 오래 활동하고, 부인도 초등학교에 있어서 초중등교육 문제를 두루 다 안다. 그래서 비리 폭로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최홍이 후보를 교장들이 가장 무서워한다. 서울교육청 민원의 80~90퍼센트를 최홍이 후보가 처리한다.”

교육 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근거를 들어 최홍이 후보가 “최고”라고 말했다. “사립교육 문제가 특히나 심각한데 최홍이 후보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정말 잘한다”는 것이다.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1백72개 전원회의 단체가 추천한 시민공천단 투표(30퍼센트), 운영위원 31명의 투표(20퍼센트), 여론조사(50퍼센트)를 반영해 4월 14일 후보를 결정한다.

추대위는 경선 일정과 규칙을 결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NGO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이유로, 일부 후보들은 충분한 후보 검증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원래 3월 12일로 예정한 후보 선출 일정이 한 달 넘게 미뤄졌다.

또 NGO들의 요구로 경선 규칙도 일부 변경됐다. 후보 등록(3월 20일) 직후 열린, 3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전원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속 단체인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KYC 등 9개 단체를 운영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과 선출 배점 중 운영위 단체들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은 자신들이 시민들의 시각을 대변해 대중적 후보를 잘 뽑을 수 있고, 추대위에서 자신들이 소외·배제돼 왔다며 운영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자는 논할 가치가 없을 만큼 오만한 태도다. 후자는 NGO들도 “[운영위 내부]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해”(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 왔고,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운영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사실무근이다.

또한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무원칙한 태도다. 사실 NGO들은 다함께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1월 13일 추대위 출범 전원회의에서 운영위를 개방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을 때 다른 주요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한사코 반대했다.

후보 선출 배점에서 운영위 단체가 전원회의의 단체에 비해 커다란 비중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주요 NGO 단체들도 참석한 수차례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마치 논의에서 배제된 것처럼 얘기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3월 23일 전원회의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대위를 탈퇴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NGO들은 탈퇴를 카드로 추대위를 압박하고 발목잡아 규칙과 일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운영위 가입 요청을 철회했다.

추대위는 후보 결정 후,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진보 후보가 승리하려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단체와 개인들의 열의를 충분히 끌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NGO들이 무원칙한 태도를 반복한다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운영과 상호 신뢰를 해치게 될 것이다.

김인숙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검찰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낙태 시술 산부인과 사무장을 결국 구속했다.

낙태 시술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다른 산부인과 병원장은 낙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처벌은 가뜰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구속된 사무장이 근무했던 병원이 수의 때문에 “8개월된 태아도 낙태”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술을 여성 자신이 원해서 한 이상 처벌받아서 안 된다. 오죽하면 그 위험한 후기낙태를 요청했을까.

또, 후기낙태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질 낙태권 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파들은 항

상 낙태권 전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후기낙태부터 문제 삼았다. 임신 24주 이후 태아는 인간에 가깝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낙태는 전체의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후기낙태는 초기낙태의 시점을 놓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자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뒤늦게 낙태를 결정할 수

도 있다. 낙태가 금지되면 오히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미루다가 후기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우파들은 태아의 독자생존력을 과장하지만, 태아가 여성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태어나서도 여성의 양육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여성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검찰은 극소수의 후기낙태를 시범케

이스로 삼아 낙태 처벌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런 분위기가 강화된다면 단지 후기낙태만이 아니라 낙태 전체를 향한 마녀사냥도 강화될 것이다.

또, 약식기소가 비록 경미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낙태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검찰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에 초장부터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핵안보 정상회담

구 체제를 지속하는 오바마의 신 핵안보 체제

4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탄 오바마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그러나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 4월 6일 발표된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보면, 오바마의 새로운 핵안보 체제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위선과 (의도적) 허점을 새로운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는 여전히 핵 절멸의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5대 핵강국들(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의 핵무기 완전 폐기는 아예 제기되지 않거나, 기약 없는 미래의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회담을 앞두고 체결될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으로 양국의 핵탄두 수가 30퍼센트 줄더라도 여전히 전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다.

게다가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오바마 정부는 감소분 외에 기존 노후 핵탄두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 공화당 우파들은 오바마 정부가 당장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미쳐 날뛰겠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핵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다.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기로 올바르게 결정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걱정되는 것은 누군가 그 길로 곧 가는 것이다.”

둘째, 오바마는 부시 정부와는 달리 비핵무장 국가에 대한 공격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핵무기를 독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빌미로 군사 침략을 위협하는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오바마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중요한 예외조항을 삽입했다. 국가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확산 방지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과 같은 경우 잠재적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미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도 오바마는 유독 이란과 북한을 NPT 체제의 ‘국외자’로 지목하고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았고, NPT 체제 안에서 핵발전소 건설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NPT를 깬데다 무시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비하면 겉핥기 수준이다. 북한 정부는 앞의 세 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협상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셋째, 회담장에서 오바마는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 — 이것의 정의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달렸다 — 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핵물질 통제를 강화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 기업과 동맹들이 핵발전을 ‘대안 에너지’로 팔아먹으면서 전 세계를 핵발전소 사고와 잠재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로 밀어 넣는 상황은 그대로 놔 둘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속하게 미국·인도 핵협정 체결을 최종 완료했다. 이제 인도는 민간용이란 명분 아래 마음껏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부시 정부가 2005년 의도했듯이 중국과 더 치열하게 핵무기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명박은 아예 ‘핵 세일즈’를 이번 회담 참가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기준도 제각각이고 핵무기 폐기 측면에서 실제 내용도 별로 없는 의제로 사상 최대 핵안보 회의를 여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가식적 무도회가 그럭저럭 굴러가게 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오바마의 위선적 댄스에 맞춰 춤을 추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러시아는 전락 핵무기에서 미국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에 공포심을 느껴 왔다. 그래서 서유럽 배치 핵무기와 동유럽 미사일 방어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미국과 협정에 동의했다.

중국이 해야 할 계산은 러시아보다 좀더 복잡하다. 중국은 이란을 미국의 먹이로 값싸게 넘겨줄 생각은 별로 없다. 이란은 중국에게 번째로 많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인데다,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게 당장은 대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제 관계다. 지정학적으로 타이완 문제에서 양보를 얻고, 경제적으로는 위안화 가치 문제가 무역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오바마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진타오 정부는 미국의 위선적 이란 경제 제재 강화 문제를 ‘우호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고 — 이미 세 번이나 유엔안보리의 이란 제재에 동의했다 — 오바마 정부는 그 대가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발표를 연기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서구 열강들,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이명박까지도 나름대로 자기 몫을 챙길 준비를 다해 놓은 듯이 보인다.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었던 NGO, 평화 활동가들, 그리고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김용욱 기자 ohatonge@left21.com



2009년 4월 3만 명 이상이 참가한 런던의 G20 항의 행동

캐나다와 한국에서 G20 항의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닳을 올렸다. 정상회의 일주일 전에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에서 민중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캐나다 G8/G20 민중정상회의의 조직자인 마라 폴린비는 민중회의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의 민중은 G8과 G20이 저질러 온 사회 불의와 환경 불의에 반대하며 이 체제 자체가 뭔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민중회의는 이런 세계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는 데서 G8이나 G20에 비할 데 없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민중정상회의의 운영위원회에는 캐나다의 각종 민중운동 단체들과 NGO들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회의, 캐나다 노동회의, 캐나다 온타리오학생연합, 캐나다평화동맹, 캐나다공공노조, 그린피스, 폴라리스 연구소 등이 연대해서 민중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더 자

세한 내용은 민중정상회의의 웹사이트 www.peoplesummit2010.ca를 통해 알 수 있다.

6월 21~27일에 토론토 전역에서 G8/G20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다. 캐나다의 풀뿌리단체들을 아우르는 캐나다공동체동원네트워크가 이 항의주간을 주관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www.g20.torontomobilize.org를 통해 알 수 있다).

L20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응할 준비도 서서히 닳을 올리려는 태세다. 민주노총은 G20에 맞서는 L20을 준비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 G20은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신자유주의에 목을 매는 시대역행적인 행상에 우리 국민들이 드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G20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노동자·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토론토 정상회의에 항의하려고 원정부정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노총의 제안처럼 G20 항의 운동이 광범하고 탄실하게 준비되려면 민중운동 단체, 진보적 시민단체, 노동운동 단체 등 광범한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예컨대, 지난 2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재정을 줄일 각종 노하우들이 열거됐다.

동시에, G20 항의 행동은 집권 후반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명박에 맞선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다.

김여진

키르기스스탄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난다

지금(4월 8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정부의 부패와 공공요금 폭중에 반대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경찰과 군대의 발표와 폭력 진압으로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하다.

한 야당 지도자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대통령궁 앞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1백여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바키에프는 2005년 민중항쟁에 의해 기존 정부가 무너지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는 정실 인사와 측근 부패로 대중의 환멸을 샀고, 국영 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진행했고, 올 1월에는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무려 다섯 곱절이나 인상했다. 또 미국 정부가 키르기스스탄 공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돕는 기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위대는 공공요금 인하, 민영화된 핵심 국영 기업 재국유화, 야당 지도자 석방, 공직에서 대통령 친인척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것은 모두 정당한 요구들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것도 정당하며, 경찰이 이들에 발포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역겨운 것은 이 지역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3대 강국 — 미국·러시아·중국 — 의 입

장이다. 이들은 수년 동안 이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해 왔다. 그러나 민중항쟁이 벌어지자 이들의 입장은 이른바 ‘안정’을 바라는 하나의 입장으로 모아졌다.

자국의 무슬림 인구를 탄압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의 급진화를 바라지 않으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학살을 위해 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부패한 정부나 이를 지원하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평범한 키르기스스탄 민중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용욱 기자 ohatonge@left21.com

아프가니스탄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를 덮으려 한 나토 군

통 워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나토가 결국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다섯 명을 살해했다고 실토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인멸하려고 애쓰더니 말이다.

나토 군의 특수전 부대원들은 야간 작전 중 총으로 쏜 죽인 여자 셋과 남자 둘의 시신에서 총알을 빼내고 총상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냈다.

심지어 벽에 난 총알 자국들을 석고로 덮고 새로 페인트칠을 하는 정성까지 들었다.

카불 남부 가르데즈 인근에서 벌어진 이 참극을 아프가니스탄인 조사관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밝혀 냈다.

처음에 나토 측은 피살자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파장이 확대되자 폭두각시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서방 측에 할 말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

진실

그는 나토의 공격 작전을 더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지인들이 그러한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대통령의 독립성을 신뢰할 때, 즉 자국 정부가 폭두각시가 아

나라는 것을 믿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회복될 것이다.” 카르자이의 말이다.

그러나 카르자이는 서방의 “공조와 지원”이 “침략”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발설했다.

카르자이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화보”하기 위해 칸다하르 주에서 나토 군이 벌이게 될 더 많은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직 파괴만을 불러오고 있는 나토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경록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4월 19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공무원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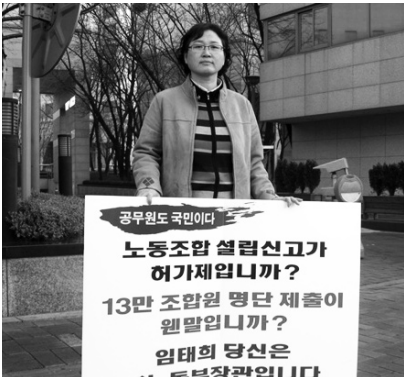


사진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은 정권에게 부메랑 될 것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3월 25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그 내용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명의의 현판, 현수막, 벽보를 제거하고, 웹사이트까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의 홍보물, 피켓팅, 수련회, 출범식, 각종 회의의 등 모든 행동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이에 항의해 4월 5일 행안부 앞에서 ‘노조 탄압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해직자 동지들 5명은 강제 연행됐다.

행안부의 공문을 받은 법원행정처도 3월 30일 같은 내용의 방침을 각 지방법원에 지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에 굴해 후퇴하기보다 1인 시위를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법원행정처가 행안부의 “불법단체 규정” 공문을 그대로 따라 쓰는 행위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대총 무마하며 넘어가면서 오히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법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니, 이토록 후안무치한 행위들이 어디 있을까 싶다.

정부의 탄압은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굴하지 말고 4·10 대의원대회와 5·15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무리수를 두며 탄압에 열중하지만, 부당한 탄압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양윤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울산건설기계지부

기계를 멈춰 8시간 노동을 쟁취하겠다

4월 12일 울산 전역에서는 건설중장비의 우렁찬 기계음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지부의 요구안은 ‘임대료 삭감 없는 8시간 쟁취’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인데,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2백만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2시간만 줄여도 일자리 4만개가 창출된다.

이미 지난 2월 19일 하루 경고 파업 때 건설기계 노동자 5백여 명이 모였고, 이후 지부에는 노조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부는 4월 12일 파업에 1천 대오를 조직하고 4월 28일 건설노조 파업 때까지 승전보를 울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전재희

현대차 전주공장 투쟁 평가

아쉽지만 큰 가능성을 보여 주다



사진 출처 금속노조 김용우 부위원장

한 달 넘게 이어진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해고 반대 투쟁이 마무리됐다. 사측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정리해고가 어려워지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18명을 희망퇴직시키는 꿈을 백했다.

결국 비정규직 18명을 지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전주공장 투쟁은 “노동자가 하나 되는 가슴 벅찬 투쟁이었다”(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이동기 의장).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정규직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우리 노동자의 의리와 신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줬다”며 “우리의 단결된 투쟁이 있었기에 내일은 더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투쟁은 ‘고속버스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는 사측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것은 단지 버스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벌어질 공장 전체의 문제였다.

더 나아가 전국의 현대차 공장들에

서 이어질 노동유연화의 전초전이기도 했다.

그래서 버스부 노동자들이 시작한 잔업 거부는 전체 공장으로 확산됐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잔업 거부로 맞섰다.

이동기 의장은 “세 번의 잔업 거부로 입은 손실보다 더 큰 자부심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연대”에 힘 입어 비정규직지회가 특근을 거부했다. 비정규직지회 한 간부는 “토요일에 특근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도 조합원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흔들림 없이 지침을 따라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정규직 3천5백명과 비정규직 1천 명이 세 차례 잔업을 거부했고, 비정규직지회(조직률은 20퍼센트)가 두 차례 특근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지금도 가입하고 있다.

한 비정규직 활동가는 “사측은 전주공장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여겼는데도

현대차지부가 같이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조차 발표하지 않은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도 손을 놓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면 노동강도와 현장통제 강화 등 정규직을 향한 공격도 더욱 세질 것인데 말이다.

이번 투쟁은 노조운동의 갈 길을 보여 줬지만, 동시에 중요한 시사점도 남겼다.

낮은 조직률과 고용 불안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해고 압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집단 가입운동을 벌이겠다”는 전주공장위원회의 결의는 중요하다. 이동기 의장은 “1사 1노조를 완성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도 이런 움직임을 따라서 약속했던 1사 1노조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전교조

교육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라!

노동부가 지난 1일, 전교조에게 규약 개정 시정 명령을 했다. 전교조 규약은 1989년에 제정됐고,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주적으로 운용돼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 삼으며 설립신고 반려 운운 협박을 하는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해직자)들에게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은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

의 권익을 지키려는 활동은 늘 징계와 해고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그 외에도 노동부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명령을 하고 있다.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한다는 규약에 대해 삭제하라고 하거나, 대의원대회 의결 후 단체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약이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공격하는 것이다.

KT

조태욱 민동회 의장 해고를 철회하라

KT사측은 4월1일 현장의 민주파 활동가 조직인 ‘KT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의장 조태욱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조태욱 씨는 민동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42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등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KT노동자들의 바람을 대변해 왔다. 민동회는 지난해 사측과 결탁한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으며 대량 ‘명예퇴직’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퇴직 강요에 맞서 왔다.

민주노총 탈퇴 이후 KT의 노동 현장 은 민주적 권리가 더욱 후퇴했고 노동강도 또한 가중되고 있다.

각종 상품시연회를 핑계로 무급 휴일근무를 강요하고, 판매실적이 없으면 퇴근을 못 하도록 하는 식의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파 노조 지도부는 ‘노사상생’을 운운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반면 얼마 전 열린 KT주주총회에서는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연간 4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올리고 집행임원급 임원들의 퇴직금을 갑절 이상 올리는 안을 통과

시켰다.

이런 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KT 사측에서는 불만의 구실이 될 수 있는 민동회 조태욱 의장에 대한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조태욱 의장은 2003년도에도 부당해고됐지만, 이에 맞서 싸워 결국 복직을 쟁취한 바 있다. 이번에도 KT 민주동지회는 투쟁과 연대를 통해 반드시 조태욱 의장 원직복직을 쟁취해 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원준 KT 노동자

기아차 화성

투쟁으로 공장장을 몰아내다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 ‘공공의 적’ 강성훈 공장장(부사장)이 파면됐다. 강성훈 파면은 노조의 투쟁이 만들어낸 통쾌한 성과다.

강성훈은 마구잡이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현장 탄압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지금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2명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노조와 대화도 없이 공문 한 장 보내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협박하는 식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화성 공장의 조합원들은 강성훈의 ‘강’자만 들어도 욕설을 내뿜는 실정이었다.

사측은 이런 자를 화성 공장에 부임시켜 화성 공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하지만 화성공장의 노동자들이 누구인가?

19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서울 한복판에 15일 동안 점거하고 싸운 베테랑 중에 베테랑 노동자들이다.

이런 노동자들을 길들이겠다는 사측의 의도는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노조는 무대표식 현장 탄압에 맞서 지난 3월부터 특근을 거부해 왔다. 한 달 동안의 특근 거부로 1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결국 강성훈은 파면됐다.

물론,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사측은 현장 통제 중단과 현안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화성지회 ‘금속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퇴근 홍보전과 현장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전임자 임금, 주간 연속 2교대 등을 둘러싼 투쟁도 승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동양광주레미콘

동양메이저를 무릎 꿇려야

동양광주레미콘분회가 사측의 운임 삭감과 노조 탄압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신동식 분회장을 비롯한 2명의 노동자들이 60미터 고공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도 벌이고 있다.

타워크레인 밑의 농성장에는 건설노조 수도권본부 소속 각 지부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동양메이저는 “건설노조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를 협상에서 배제하자는 사측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이 투쟁의 승리는 4월 말 건설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회 전용수 지회장은 건설노조 차원의 지속적인 연대 부족을 지적하며 “지도부가 투쟁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광주 투쟁이 우리 모두의 투쟁이란 것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며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투쟁이 더 장기화되고 어려워지기 전에 구체적인 연대투쟁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진보의 재탄생: 노회찬과의 대화》(노회찬·김어준·진중권 외, 꾸리에, 4백47쪽, 1만 7천 원)
《리얼진보》(강수돌·정태인·오건호·장석준 외, 레디앙, 4백3쪽, 1만 5천 원)

진보의 재구성에 관한 진보신당의 고민

《진보의 재탄생》은 홍세화·진중권·변영주·김어준·우석훈 등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이하 존칭 생략)와 진보의 미래를 놓고 대담한 기록이다.

노무현의 유고 《진보의 미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보신당 상상연구소가 기획한 《리얼진보》는 노무현의 진보는 가짜며, ‘진짜 진보’의 모습을 제시하려 한다. 강수돌·김상봉·정태인 등 지식인과 노회찬·장석준 등 진보신당 논객들의 글을 망라했다.

‘진보의 재구성’을 내세운 진보신당은 촛불항쟁에선 수천여 명이 새로 가입했고, 생태를 중요한 의제로 부각하는 등으로 진보의 의제와 외연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창당 2년이 지난 지금, ‘진보의 재구성’의 성과를 다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의 재탄생》 대담자들은 대중과 만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김어준과 변영주는 세련되고 개방적인 진보로 변화할 것을, 홍세화는 “민중의 집” 같은 “일상의 정치”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진중권은 ‘진보의 성장 대안’을 요구한다.

《리얼진보》의 필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본적 성찰과 고민”을 강조한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가 파산했으므로, “긴 호흡”으로 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장석준은 “이윤 확보의 자유”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진보와 개혁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므로 “자본주의 극복 의지”를 부각하자고 주장한다. 한재각은 “환경·생태 분야를 다루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평등 같은 주제와 연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자유주의 정치와 선 긋기를 강조한다. “시민의

이익과 충돌하는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도 “노동계를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에서도 [노무현과 이명박] 두 정권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회찬은 이런 의견을 대체로 조합해 “서민중심형 복지동맹”(《리얼진보》)을 만들자고 한다. 이것이 “반MB 대안연대”다.

이를 위해선 “한나라당-민주당 체제를 극복”해야 하며, “보수와 진보의 양대 축으로 가려낸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진보의 재탄생》

이런 ‘진보의 재구성’론이 장벽에 부딪히는 곳은 다름 아닌 “주체” 문제다.

상상연구소는 “노동운동의 힘이 중심에 버티지 않는 한”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상상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필자들은 현재 조직 노동자운동을 불신한다.

이런 불신이 생긴 건 “복지를 통한 증세는 정규직 노동자 또한 … 더 많은 세

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 민주노총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김정진, 《리얼진보》) 하기 때문이다.

주체

오건호의 말처럼, 조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요구를 집중하는 선도적 실천”(《리얼진보》)이라면, 이들이 말하는 노동운동의 ‘재구성’은 노동계급에게 계급투쟁 대신 ‘계급 양보’를 요구하는 셈이다.

“사회연대전략”은 더 열악한 집단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 노동자들의 양보에서 찾는다.

여기서 이들이 노동운동 안에서 새 “주체”를 쉽게 못 찾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에선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

노회찬도 이렇게 자조한다.

“[진보정당 안에서도] 지금은 목표가 … 자신이 국회의원 한번 되는 게 거의 전부인 경우도 있고 … 집권하면 세상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진보의 재탄생》)

노회찬은 홍세화와 한 대답에서 “진보신당의 좌표, 공식적인 노선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경향에 있다고, 또 그래야 한다”(《진보의 재탄생》)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가치로 자본주의의 폐해와 맞서 싸우려면, “좋은 진보정당”(노회찬) 만으로 부족하다.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해 자본과 벌이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조직 노동자들이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 선도적 실천”을 해야 한다.

두 권의 책에서, 특히 《리얼진보》에서 빠져 있는 진보 재구성 전략이 바로 이것이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빅토르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 지만지, 1백56쪽, 1만 2천 원

못 사형수들을 위한 변호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나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젊고 풍요로운 내 영혼은 온갖 환상으로 가득했다. … 언젠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렇게 순수하고 행복한 시절 다음에 범죄로 시작되고 단죄로 막을 내리는 끔찍한 시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한 사형수의 독백을 통해 사형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와 살로 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타고난

악마는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전달한다.

사형수들은 달콤한 옛 추억에 잠기는 시간도 간수들의 말 한마디면 “공중으로 날아가려는 곤충을 절망에 빠뜨리는 실처럼” 현실로 난폭하게 끌려오고 만다. 정신적 고통은 마치 “기요틴의 칼날이 6주에 걸쳐 떨어지는 것과 같”고, “심오 분이 지날 때마다 … 일년 늙는 것만큼” 늙어 간다.

위고는 1829년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 부러 자신의 이름을 빼고 익명의 사형수가 남긴 편지로 소개했고 3주 뒤에야 본인이 쓴 것임을 밝혔다. 5년 뒤에 쓴 서문에서 그는 이 책이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직접적·간접적 변호라는 사실

을 표명한다, 아니 오히려 큰 소리로 고백한다”고 썼다.

위고는 모든 사형수들을 옹호하려고, 이 소설의 주인공을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형수들의 일반화된 모습으로 그려려고 애썼다.

그래서 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묘사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이 사형수가 어떤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았는지 끝내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사형수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된다.

한수영

천안함 침몰사고 특집

군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영화 두 편: 〈용서받지 못한 자〉, 〈세친구〉

윤종빈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2005년 작)는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세 주인공 — 신인 시절 하정우를 볼 수 있다 — 의 탄탄한 연기, 군대의 억압적 본질을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한 연출력 등이 그 해 최고의 독립영화로 주목 받았다.

영화는 선임병과 후임병으로 만나는 중학교 동창 태정(하정우)과 승영(서장원) 그리고, 승영의 후임병으로 들어 온 전형적인 ‘고문관’ 지훈(윤종빈)이 군대의 억압적 위계질서와 폭력 때문에 갈등하다, 승영과 지

훈이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준다.

영화의 비극적 결말이 관객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군대 내 사망 사고 원인 1위 자살”이라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부대 내 촬영을 위해 ‘전우제’를 다룬 영화로 속였던 윤종빈 감독이 육군에 고소당하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영화 〈세친구〉(1996년 작)는 임순례 감독의 첫 장편영화다. 만화가를 꿈꾸는 무소속(김현성), 특별한 꿈도 없이 사는 삼겹(이

장원), 미용사를 꿈꾸는 섬세(정희석)가 고등학교 졸업 후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외된 자들의 뒷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임순례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돋보인다.

이 영화에서도 20대 초반의 주인공이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자해하고, 한계 체중을 넘기려 폭식을 한다. 지금도 평범한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군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한 번쯤 꿈꾸는 일이다. 군대는 악몽과 같은 것이다.

최영준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린다.

최근 발표된 뛰어난 여성 영화들을 소개하는 ‘새로운 물결’에서는 거장 마가레테 폰 트로타의 전기영화 〈비전〉, 아프리카에서 백인 정착민과 민족해방 운동 간 관계를 그린 클레르 드니의 〈백인의

Zeit〉, 근사한 성장영화 두 편 〈물고기 아이〉와 〈별이 빛날 때〉 등을 상영한다. 지난해 가장 중요한 국제적 사건 중 하나였던 이란 대선 부정 항의 시위를 다룬 하나 마흐말바프 감독의 〈혁명

의 시간〉도 상영한다.

‘퀴어 레인보우’ 섹션에서는 대중성과 사회성을 성공리에 결합한 〈내 여자친구의 커밍아웃〉, 〈파로에서 온 내 친구〉가 눈에 띈다.

〈블레스드〉와 〈버려진 아이〉는 ‘쟁점 — 모성에 관한 질문’ 섹션의 작품들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생생하게 그린 수작이다.

‘아시아 스펙트럼: 인도네시아, 포스트 98’에서는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 항쟁 후 등장한 젊은 인도네시아 여성 영화인들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하며, ‘이주여성 영화 제작 워크숍’에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자기 삶을 그린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못생긴 꽃은 없다”



《아름다운 전쟁》, 최홍이, 말과창조사, 3백34쪽, 9천 원.
《평교사는 아름답다》, 최홍이, 열림원, 2백70쪽, 7천 원.
《고추잡자리》, 최홍이, 계간문예, 2백64쪽, 1만 원

반평생을 평교사로 일한 최홍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저서 《아름다운 전쟁》, 《평교사는 아름답다》에는 무엇보다 원칙을 중요히 여기고 살아온 그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독재자 전두환이 수업을 참관하자 수업을 중단해 버린 에피소드는 목숨보다 신념을 중히 여기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 준다.

그는 “내 수업 중에 신군부의 실세와 마주하고 있더니, 수업을 중단하자” 하는 대쪽 같은 강단으로 부패한 친정부 교장들에게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었다.

‘돈키호테’ 평교사는 교육위원이 된 후 별명을 또 하나 얻었다. ‘포청천’이다. 그는 교육위원이 되고서도 “교장 하려면 최홍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명성을 그대로 이어 갔다. 부패한 관료 행정을 묵과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위원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교육부, 교육청과 결탁한 교장들과 한판 싸움을 벌인 것이다.

대쪽

한편으로 그는 소신을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당곡고등학교에 재임하던 시절, 그는 ‘학교 주변 주차금지 및 견인구역 지정 투쟁’을 6개월 동안 벌여 성공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차량 사고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를 설득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했다. 결국 ‘투쟁’은 성공했고 이들의 등하굣길은 안전해졌다.

그를 이렇듯 투사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그의 또 다른 저서인 《고추잡자리》는 조심스레 실 끝을 내보인다.

《고추잡자리》의 첫부분은 그의 어린 시절을 다룬다.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으로 퇴학당한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는 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 좌익 사범으로 총살당한다. 이것은 20세기 거의 내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로 사는 비애를 알게 했고, 퇴학을 당해도 옳다면 굶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을 물려줬다.

핍박받고 차별받는 설움을 아는 그가, 돈이 없어 폐결핵을 치료하지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둔 명희를 보고 안타까워만 할 수 있었을까. 강직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가 공장 사장이 일요일 등교를 불허해서 제적당한 친구, 전신마비의 몸으로 전철로 통학하다 결국 포기한 완석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결국 그를 투사로 만든 것은 “계급을 고정시켜 그 현상을 대물림”시키는 현실이었다.

《고추잡자리》에서 그는 “못생긴 꽃”에 관해 말한다. “새들은 저마다 다른 소리로 사랑을 나누고, 꽃잎들은 제 향기로 생명을 노래한다.” 결국, “잡초는 없다.” “못생긴 꽃도 없다.”

모든 아이들이 “제 향기로 생명을 노래하는” 교육, 아이들이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분이 라면 ‘못생긴 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평교사의 저서를 읽어 보시라.

조익진



2008~2010 언론노동자·시민 사진전

국민, 대한민국을 찍다

2010년 4월 16일(금)~21일(수)/오전11시~오후 8시
서울갤러리 1관(프레스센터 1층)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사진: 김숙영 기자

서울역 앞 노숙자들 한국에서도 IMF 위기 이후 경제 성장은 계속됐지만 빈곤은 오히려 늘었다.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새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동훈 기자**가 자본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체제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최근에는 경제가 조금 회복하는 듯 보이지만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번 경제 위기 전부터 높은 실업률과 소득 격차 확대 등 양극화로 삶이 어려웠는데, 이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고 생각한다. 다양한 상품을 풍부하게 생산하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본주의가 현실 가능한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부족한 물자를 아껴 써왔단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기에 충분한 만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왔다.

그래서 1백60년 전에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번져갈 무렵,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겨우 1백 년도 못 되는 기간에 과거의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대한 생산력을 창출해 냈다” 하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런 생산 혁신은 자본가들의 냉혹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나왔다. 이제 생산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그리고 이윤 논리가 이제서 생산력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구실을 한다. 가장 적나라한 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들 만큼 충분한 곡물이 생산되는데도 수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윤 논리는 재앙을 불러 올 기후변화도 낳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뺏기거나 줄여들까 봐 재앙으로 가는 환경 파괴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황

설사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 점차 빈곤이 사라지고 기후변화 같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생산력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공황을 자본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뿐 아니라 1970년대 말, 1990년대 초, 1997~98년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까지 공황은 계속됐다. 생산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공황 때, 멸절된 자원과 설비 등은 대규모로 파괴되고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이 공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다른 자본가들보다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려 애쓴다. 보통 더 효율적인 생산방식은 노동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설비와 기계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전체에서 공장과 기계류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점점 커지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런데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이다. 따라서 이윤율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윤율이 떨어져 자본가들이 투자를 줄이면 생산된 제품이 소비되지 못하면서 생산은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공황으로 치닫게 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자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으로 고통을 전가하며 이윤율을 회복하려 한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은 더 장시간 일해야 한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의 노동시간은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오히려 늘었고, 이번 위기 전에 미국의 최저임금은 그전 20년 동안 20퍼센트 하락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가 정체하거나 줄기도 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더라도 점차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노후화되면서 경제 위기는 더 자주 오고 더 길어지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는 끔찍한 야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은 파시즘, 유대인 대학살,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참상을 낳은 바 있다.

계획

이런 불합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은 간단하다.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이윤에 따라 좌우하는 생산 시스템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이다.

대중이 경제적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계는 여전히 있는데 생산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고통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끝낼 수 있다.

흔히 그런 대안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한다.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주요 제품은 몇몇 기업들이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주요 대기업은 모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현대와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몇 년 전부터 생산 계획을 짜고 공장을 확대하거나, 수많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TV, 핸드폰 심지어 음료수, 치약까지 몇몇 대기업들이 생산을 장악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다.

이윤 경쟁 때문에 파괴적 결과로 연결되는 이런 계획을 대중의 필요를 위한 민주적 계획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

끝으로, 옛 소련과 동구권에서 그런 시도는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에는 생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결정이 없었다. 옛 소련에서 지배자들의 목표는 서방과의 군사적 경쟁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는 미국과 견줄 만한 것들을 생산하지만, 대중의 삶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인색했다.

이것은 서방 자본주의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자본 축적에 노동자들의 삶을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은 오늘날 부의 생산을 통제하고 소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 때문이다. 체제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계급의 대규모 투쟁만이 이윤을 위한 생산 체제를 끝장내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논설

4~5월 노동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

민주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과 함께 철도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가 4월 말 투쟁을 선언했다. 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도 5월 중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직 노동계급이 본격적인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매우 불안정하다. 여전히 지배계급의 유일한 위기 탈출 수단은 위기 비용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지표가 개선되는데도 노동자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후퇴했고, 불만과 분노가 누적돼 왔다.

그만큼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의 갈등이 첨예해졌고,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져 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올 초에 한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파업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고 우려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세달 동안 한진중공업, 발레오만도, 현대차 전주공장, MBC 등에서 사측의 공세와 정부 탄압에 맞서 투쟁이 벌어졌고 일부 작업장에서는 여전히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저항의 봄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커져가 쌓인 불만을 조직하고 정부와 사장들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 작업장 투쟁, 예컨대 쌍용차 투쟁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했을 때조차 한사코 한 기업 내 투쟁으로 가두려 했던 지난해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선거를 이유로 투쟁을 중단하거나 자

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투쟁을 자제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는 집권당에게 유리할 뿐이다. 대규모 투쟁 건설이 이데올로기 지형을 왼쪽으로 옮겨 집권당의 패배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변혁가들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폭넓게 건설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투쟁 기금을 모으고 투쟁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지원 운동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고,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 투쟁의 대의를 방어하는 것 등을 포함한 다.

이때 변혁적 노동조합 투사들의 몫이 중요하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때 노동자 대중이라는 큰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한다. 작은 톱니가 큰 톱니를 돌리려면 서로 맞물려 있어야지 간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변혁적 노동조합 투사들은 투쟁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공장 울타리를 넘어서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고 각 투쟁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투쟁을 건설하려면 노동자 계급의 힘과 학생들의 투쟁을 결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노동자 투쟁 지원은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그리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외치며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세금 인상 등에 맞서 수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4월 말 투쟁을 앞둔 남한의 노동계급도 그리스 노동자 투쟁이 갈 길을 보여 준 것처럼 단호하게 저항의 봄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우경 전략 비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자주파들은 반MB연대에 필이 쫓겼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외곽에서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계급 투표 실현”을 말한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기계적인 사고인가.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 전략 때문에 계급 투표는커녕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본지 4면을 보시오).

물론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한나라당 빼고 누구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리고 선거 논리상 한나라당을 꺾으려면 (그것이 설령 민주당 후보일지라도) 당선 가능한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이면 그럴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자본가 야당에게 투표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투표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투쟁이다. 좌파는 결정적이지 않은 투표 문제 때문에 노동계급이 분열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자본가 야당과 선거연합을 꾀하느라 오히려 노동계급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있다. 진보신당은 민주대연합을 비판하지만, 그 당도 한때 ‘5+4 회의’에 참여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지금도 노동계급 속에서 진보대연합을 적극 호소하고 있지 않다.

모순

민주노동당에게 반MB연대는 6월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승리의 열쇠”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자주파는 반MB연대의 완성을 2012년 “진보적 민주연립정부”라고 본다.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차기 정권에서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부담’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자주파는 1980~90년대와 달리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반MB연대가 과거 민주대연합 전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인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반MB연합 노선은 단순히 전술이 아니다. 그 당의 집권 전략(“진보적 민주연립정부”)이다.

또, 민주노동당의 존재 자체가 계급연합의 위협성을 막을 방안 유리도 아니다. 1930년대 스페인과 프랑스의 민주대연합(당시 용어로는 인민전선)은 20세기 좌파 역사에서 가장 재앙적인 경험이었는데, 당시 두 나라 공산당의 영향력은 지금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런데도 공산당들은 인민전선 내에서 자본가 정당에 정치적으로 종속됐다.

게다가 자기 힘에 대한 근거 없는 과대평가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 옷자락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계급투쟁의 압력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투쟁을 지원한다는 점도 봐야 한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반MB연합에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다. 그러면서도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을 열의 있게 지원했다. 그 결과 최근에 한진중공업 노동자 1백여 명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노동계급에 그 기반을 두고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면서도 계급 타협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의 모순은 계급투쟁이 혁명적으로 고양되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배신의 위험성을 내포한 모순이다.

민주노동당이 우경 전략을 가속화하는 불길한 현실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4월 말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홍보전과 총회를 개최하며 투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말 철도노조 차량지부 노동자들 1백50여 명이 서울역에 모여 상경투쟁을 벌였다. 차량지부 노동자들은 공사의 일방적인 검수주기 축소와 정비업무 외주화에 맞서고 있었다.

탄압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들은 한껏 고양돼 있었다. 노동자들은 조합비 인상 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두고 “파업을 앞둔 투쟁 의지가 그만큼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차량지부 유재호 조합원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역대 최고의 찬성률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결과니까 기분이 업됐지요.”

전기지부 노복환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의지가 컸다고 말했다.

“함께 싸운 동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죠. 사측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일강화(야간근무 축소)와 검수주기 축소도 싸워서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겁니다.”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은 최근 안전을 점검하는 검수주기를 1일에서 7일로 바꾸고, 일부 외주화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3년 동안 철도공사에서 일했다는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부품 조달이 어려워 다른 차량의 부품을 빼 대체하거나, 고장난 부품을 다시 고쳐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나마 매일 검수로 사고를 방지해 왔는데, 검수 주기를 축소한다니. 대부분의 차량이 20년 이상 된 차량들이라 검수를 자주 안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차량지부의 권기태 조합원은 이명박과 보수 언론의 고임금 비난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파업때 우리가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교대근무로 밤잠을 설치며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받는 월급입니다. 고위간부들이 수억원 씩 연봉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정부는 지난해 “대폭적으로 복지를 축소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철도공사의 사내복지기금은 단 한푼도 없다!(2008년 철도공사의 경영실적 보고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실질적 파업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신의 직장”

이미 노동자들은 공사측의 무더기 징계와 가중 처벌 협박, 통제와 감시 때문



사진 레프트21

3월 31일 서울역에서 열린 차량지부 조합원 집회. 이날 집회에는 ‘다함께’ 회원들도 함께했다. ‘다함께’는 전기지부 조합원 집회와 홍보전에도 함께 하는 등 연대를 이어가며, “철도투쟁의 확실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에라도 3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량리 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철도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 지난 2차 파업이었습니다. 이제 3차 파업은 최소 8일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이대로 밀릴 수는 없으니까요.”

“파업 이후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더 공

고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이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고양시에서 온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의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사측은 이번에도 노조의 파업 명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필수유지 업무에 속한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이

럴 바엔 다 같이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자들은 단결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대투쟁이 잘 안 됐던 게 가장 아쉬웠어요. 4월에는 공동 투쟁도 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도 파업을 하겠다니, 다 함께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려는 투쟁

화물연대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기업주들과 최소한의 법적 보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려는 것이다.

김종학 씨(48)는 이렇게 말한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화물운송료는 10년 전, 20년 전과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물동량이 줄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어요.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매달 몇 백만 원씩 할부금이 나옵니다. 방법이 없으니 죽어라고 일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집에 못 가요. 밤낮없이 일하지 않으면 월 1백만 원도 못 법니다. 먹고 사는 정도의 수입을 만들려면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화물연대 경기남부지회 함광식 지회장은 표준요율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타면 요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것처럼 화물운송도 최저운임료를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2008년에 파업하니까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화주들, 운송회사들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온갖 화물악법이 판을 치죠. 내가 있는 평택항에도 화물악법으로 차 뺏기고 원통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판을 도난당하는 등 황당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악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해요.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



사진 레프트21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을 건설하는 화물연대

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루 10시간 일하고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쥐꼬리만큼의 돈만 남는 생활을 할 겁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김영호 씨는 불법 다단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산을 해보면 화물은 화물노동자들이 운송하는데 중간에서 전화 통화나 팩스로 운송 하달을 하면서 30퍼센트 정도가 사라져요.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하던 사람들이 중간 알선업체 차려서 운임을 잘라먹는 겁니다.”

건재

화물연대 경기남부지부 이봉주 지부장은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니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산재보험도 우리가 1백퍼센트 다 내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투쟁을 통해 단결을 맺어 왔는데 최근 이것을 뒤엎으려고 해서 투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의 영풍분회가 파업을 해서 화물연대 활동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년이든 십년이든 싸울 것입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최근 전국 순회 투쟁을 마치고 4월 17일 집회 조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봉주 지부장은 “온갖 탄압에도 화물연대가 건재하다는 것을 정부와 자본에 똑똑히 보여 주고 싶다”며 결의를 밝혔다.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

파업 준비중인 건설노조 활동가들이 말한다

“단결과 연대의 전통을 되살리려 합니다”

4월 말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건설노조 박재순 수도권본부 북부건설기계지부장과 전용수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회장을 인터뷰했다.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재순 :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건설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탄압을 중단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텀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노동시간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으로, 사장들이 하루 24시간 일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합니다. 반면 단가는 깎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에 불만이 많습니다.

전용수 : 살기 힘든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중 50~60퍼센트가 실업자예요. 반 년 이상 일거리가 없어요. 불만에서 더 나아가 아예 낙담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기도 하죠.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는데,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동양광주 레미콘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쟁이 중요

합니다. 동양광주 레미콘 투쟁과 4월 파업이 만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재순 : 우리는 8시간 노동제를 정착화하기 위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구리에서 성과를 보고 있고, 의정부나 양주에서도 성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려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건설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최대한 동원하고 멋지게 싸워 꼭 이기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도 꼭 같이 투쟁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수 :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전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가 그걸 주도해서 함께해 보려고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쟁은 전기원 따로, 건설기계 따로, 펌프가 따로 했습니다. 그것을 끌어 모아 함께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투쟁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만들을 누가 조직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진석, 조성민